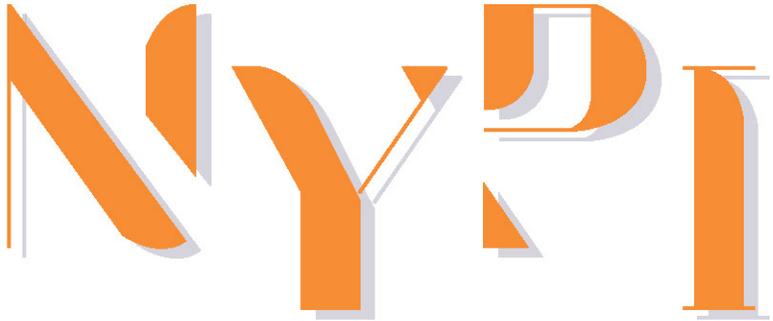


연구보고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책임연구원 연보라

공동연구원 이윤주 김현철



연구보고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책임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포럼 및 전문가자문(TF운영),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분야 및 국내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을 토대로 모델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덧붙여 전국의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의 기능들이 유사하며, 정책 수혜 대상이 다수 중복되는 등 지역 단위에서 분산되고 파편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나 지속성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지만 실제 연계 현황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지역에 따라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 현황에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델(안)의 세부 내용별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술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 개발의 3가지 원칙을 도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다문화, 지역기관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사업의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포럼 및 전문가 자문조사(TF운영)
- 설문조사

3. 주요결과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 지역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와 세부 유형에 차이가 존재함.
-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 수의 급증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집단 내에 이질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은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의 기능들이 유사하고, 정책 수혜 대상도 다수 중복되는 상황으로 부처 간 상이한 전달체계하에 지역 단위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이 분산되어 진행됨.
- 단위학교 차원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 수행은 실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민관학 지역협의체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단순 협의회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네트워크 기능으로서는 한계를 가짐.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주로 공공조직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형성되며, 최근에는 민간부문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
- 따라서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매개로 참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컨센서스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공동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인프라의 존재 여부가 중요함.
- 또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동기요인(예: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볼 때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상위법의 부재, 지원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인하여 일회성 또는 분절적인 지원 형태로 진행되어 장기적인 계획수립이나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독일의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이 보편성과 특수성에 기반이 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법(SGB)을 근간으로 한 교육 및 직업교육이 연방-연방노동청-주정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이주청소년지원센터인 JMD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함.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역 내 연계 현황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연계 현황에 차이가 있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환경과 여건이 각각 달라서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과 필요로 하는 요인 역시 차이가 존재함.
- 구체적인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관기능의 선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인력 배치와 인건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또한,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통합 및 유관기관의 연계가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한 협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지역 내의 연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연구보고 19-R57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4. 연구추진체계	9
I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11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현황	13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 현황	18
3. 소결 및 시사점	29

Ⅲ.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분석	33
1.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에 따른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모델 특징	35
2.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45
3. 소결 및 시사점	52
Ⅳ.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57
1. 국내 지역기관 지원사업 사례 분석	59
2. 해외 지역기관 지원사업 사례 분석	66
3. 소결 및 시사점	96
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99
1. 조사개요	101
2. 조사결과	105
3. 소결 및 시사점	125
Ⅵ.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129
1. 모델 개발의 근거	131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모형 및 운영 방안	134
참고문헌	149

표 목차

표 II-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여성가족부)	23
표 II-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교육부)	28
표 III- 1	거버넌스 개념	36
표 III- 2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 비교	37
표 III- 3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분석 틀	44
표 III- 4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 체제	51
표 IV- 1	지원사업 현황(2018)	61
표 IV- 2	연계사업 현황(2017)	63
표 IV- 3	연계사업 현황(2018)	65
표 IV- 4	이주민 자녀 교육정책의 목표	68
표 V- 1	조사대상자 분포	102
표 V- 2	설문조사 영역별 세부 내용	102
표 V- 3	지역별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7
표 V- 4	지역별 지역기관 연계 원활성 인식 정도	108
표 V- 5	지역별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중복응답)	110
표 V- 6	지역별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중복응답)	111
표 V- 7	지역별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114
표 V- 8	지역별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	116
표 V- 9	지역별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118
표 V-10	지역별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120
표 VI- 1	연구결과의 모델 반영 사항	131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II- 1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2006~2018년)	14
그림 II- 2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15
그림 II- 3	다문화학생 수 추이(2012~2019년)	16
그림 II- 4	다문화학생 유형별 추이(2012~2019년)	17
그림 III- 1	돌봄협업체 운영 체계	46
그림 III- 2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47
그림 III- 3	시·도별 혁신교육지구 운영체계	49
그림 IV- 1	연계사업 현황(2017)	64
그림 IV- 2	JMD 지역상담소	74
그림 IV- 3	“Uberaus” 홈페이지	77
그림 IV- 4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 이주배경 고교생 취업 지원 응원 세미나	91
그림 IV- 5	‘필리피노나가이샤’ 제작 배부 <진로가이드북>	93
그림 IV- 6	필리핀 출신 청소년들의 단기 직업 체험	94
그림 IV- 7	NPO법인 청소년자립원조센터 ‘YSC글로벌스쿨’에 참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도쿄외국어대학교에 견학을 간 모습(도서관과 학생식당)	95
그림 V- 1	설문문항 개발 절차	104
그림 V- 2	설문조사(웹조사) 화면	105
그림 V- 3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6
그림 V- 4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원활성 인식 정도	108
그림 V- 5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중복응답)	109
그림 V- 6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중복응답)	110
그림 V- 7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113
그림 V- 8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	115
그림 V- 9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117

그림 V-10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119
그림 VI- 1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모델	136
그림 VI- 2	서비스 영역 및 지역사회 자원 현황 분석	138
그림 VI- 3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네트워크) 운영 모델	139
그림 VI- 4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강화	140
그림 VI- 5	사업추진 모델	142
그림 VI- 6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서비스 연계 예시(안)	143
그림 VI- 7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아동·청소년 서비스 연계 예시(안)	145
그림 VI- 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로드맵	148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인 이주민 인구는 2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10.31.). 다문화가족 정착주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1년 38천 명이었던 다문화학생 수는 2019년 137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학생 대비 2.5%로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9b;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10.31.). 다문화가족 자녀는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 인구는 당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주민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넘어가는 시기도 곧 임박할 것이며, 인구의 구성은 그만큼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김현철, 201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교육과 진로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 2019년 4월에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다문화가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1) 1장은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소외계층으로 낙인하여 부정적 인식을 덧씌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 간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04.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이나 적합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기존 사업들이 상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다문화 정책 부문에서 정책 간 유사성과 중복에 따른 총괄조정 또는 협업체계 부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교육부, 2019a; 김이선·민무숙, 2010; 오성배·김현철·김성식·김재우·박새봄, 2013; 장임숙, 2013). 즉 다문화 정책이 체류, 노동,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 영역에 따라 다양한 개입주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부문 간에 그리고 부문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상호 조정이 되지 못한 채, 또 각 부처, 기관, 조직에 따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유사·중복 지원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장임숙, 2013).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식 정책추진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다문화 정책이 압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최무현·김경희, 2015).

이는 비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덕성여대산학협력단(2009)은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퍼즐(puzzle)에 비유하였는데, 이미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퍼즐 조각처럼 정교하지 않으며, 이는 사각지대와 중복수혜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아교육, 농촌 취약계층 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강창현, 2006;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명숙·김지민, 2016; 송미령·조미형·

심재현·유은영·김나리, 2016; 장명림·김은영·이정림·박수연, 2009; 최균·정경배·장진용, 2011). 이상의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축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정책의 중복수혜와 사각지대의 발생에 대한 문제는 애초부터 각 부처의 정책이 특성화되거나 다기능화되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덕성여대 산학협력단, 2009), 사후적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특성화하거나 다기능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자체는 위임받은 중앙부처 사업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지역수준에서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부처와 관련된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중복적으로 시행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0: 9, 장임숙, 2013에서 재인용). 더욱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이주민 공동체 대표 등 민간부문에서의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최무현·김경희, 2015).

지금까지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총괄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보건복지가족부·덕성여대산학협력단, 2009).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 또는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조정하는 상향식의 정책 추진 방식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지역 거버넌스로의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고(최무현·김경희, 2105),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업들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이 앞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에 2개소의 이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요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다음으로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델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을 검토하고, 유사 분야에서의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에서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전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담당 지역 내 지역기관 연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저해요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정책 및 사례 분석,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럼과 전문가 자문조사(TF),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모형 마련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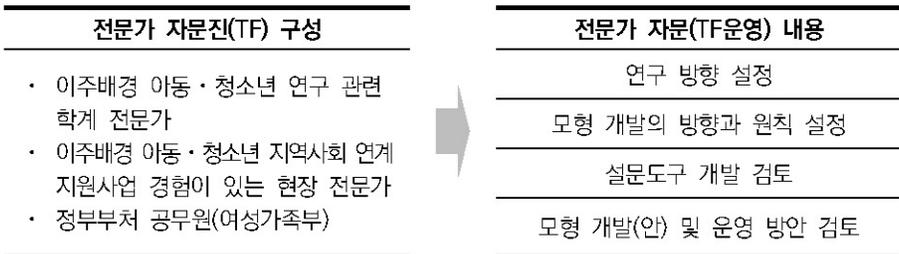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지역기관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이론적 모형과 국내외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설문도구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자문(TF운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모형 개발의 방향과 원칙 설정, 설문도구 개발, 모형 개발(안)과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정부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초기 연구 방향 설정부터 최종 모형 개발 검토를 실시하였다.



3) 정책포럼 개최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 및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육청,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4)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기관(레인보우스쿨 운영 기관 등)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지역 기관 연계의 필요성, 연계 현황, 연계에 대한 정책 요구도, 지역기관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관계부처와 연구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여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연구 방향의 수립과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20년에 시행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모델의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앞서 서술한 정책포럼을 관련부처와 공동개최하였고,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모델 모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2020년에 실시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은 연구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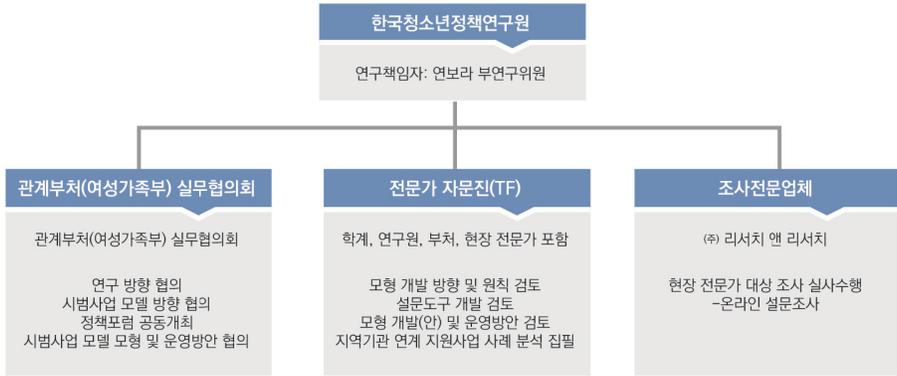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 I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현황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 현황
- 3. 소결 및 시사점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현황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범위에 대하여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³⁾ 제18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본인 및 가족이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 청소년으로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⁵⁾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⁶⁾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다양한 이주 형태를 고려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근래에 다문화가족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초국가적인 이주의 증가 등으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

2) 2장은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집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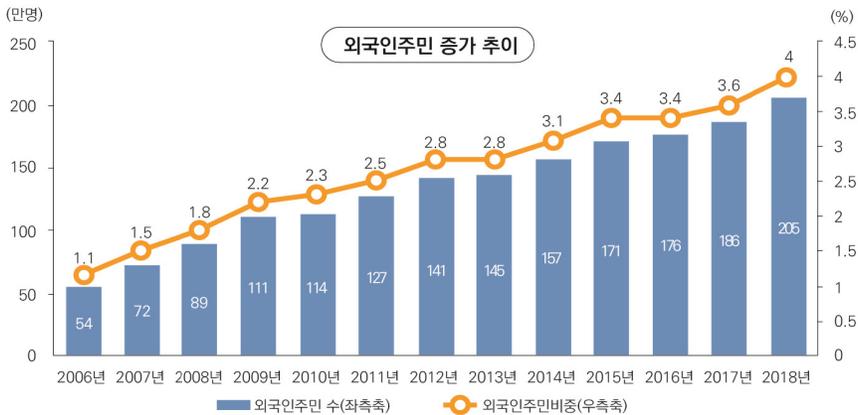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54,621명으로, 이는 총 인구대비 약 4.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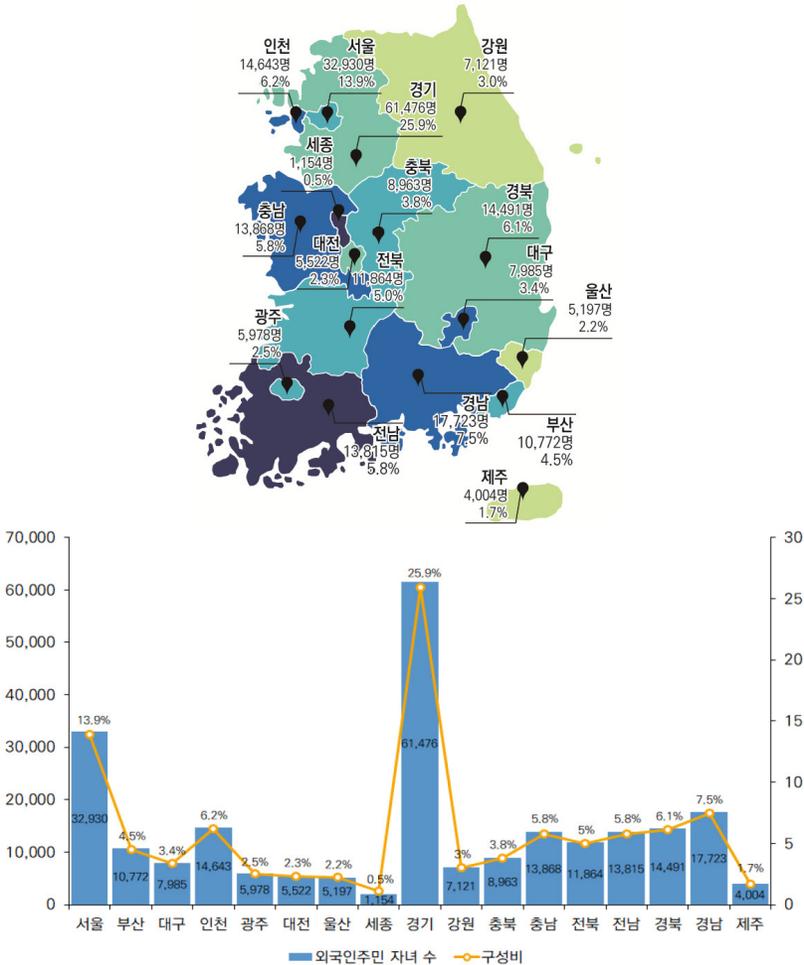


* 출처 : 행정안전부(2019.10.3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웹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iT7gBbpM0xLQtMudRkypf1dl.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Id=73857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그림 II-1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2006~2018년)

이 가운데 외국인주민자녀는 237,506명으로, 2017년(222,455명)에 비해 15,051명(6.8%)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 연령(만 6세 이하) 48.1%(114,125명), 초등학생 연령(만 7~12세) 38.9%(92,368명), 중고생 연령(만 13~18세)이 13.1%(31,013명) 분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10.31.).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25.9%(61,476명)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13.9%(32,930명), 인천 6.2%(14,6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상당수(46.0%, 109,049명)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안산시 5,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4,817명, 부천시 4,455명, 창원시 4,168명 등으로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 수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별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10.31.). 이와 같이 지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의 이질성은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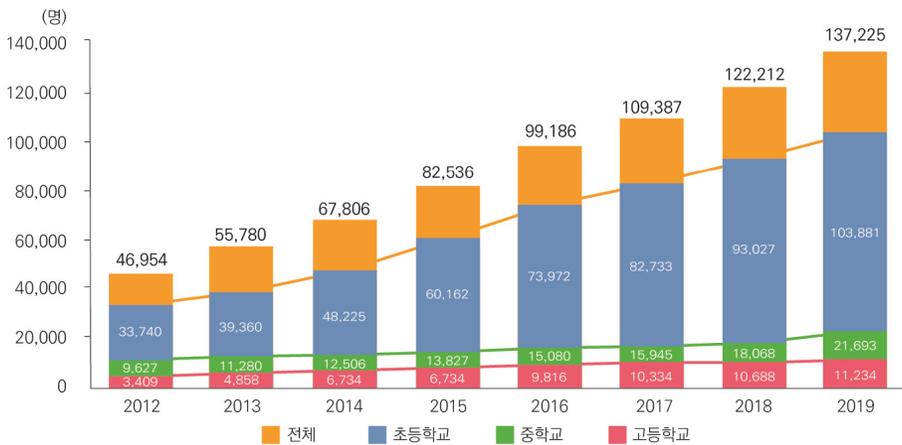


* 출처 : 행정안전부(2019.10.3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iT7gBbpM0xLQtMudRkypf1dl.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Id=73857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그림 II-2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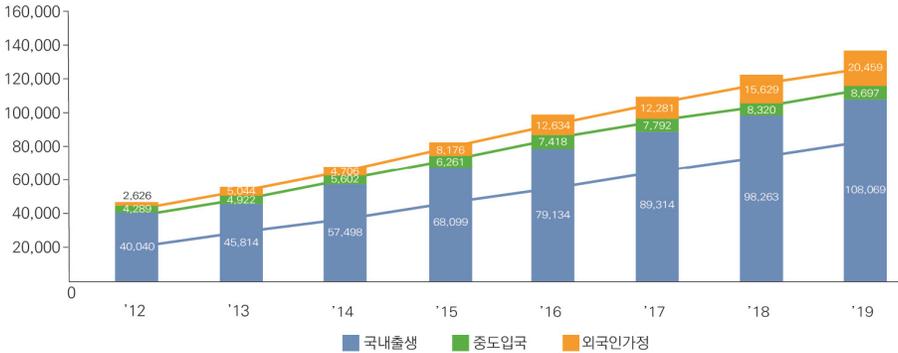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하거나 외국인 무연고 아동·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도 크게 늘어났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 다문화학생 수는 38,678명으로 전체 학생의 0.5%였으나, 2019년에는 137,225명에 이르러 전체 학생의 2.5% 수준을 차지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2.03.13.; 교육부b 보도자료, 2019.08.29.). 이때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 가정(국내출생+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가 급증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 내에 이질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 출처 : 교육부b(2019.08.2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10월 28일 인출.

그림 II-3 다문화학생 수 추이(2012~2019년)



* 출처 : 교육부(2019.08.2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10월 28일 인출.

그림 II-4 다문화학생 유형별 추이(2012~2019년)

이처럼 한국사회 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결핍의 관점에서 이들이 겪는 학업, 심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많은 관련 연구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학습부진이나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며, 정체성 혼란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언어문제나 진로 및 사회적응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갑성, 2008; 김순규, 2011; 김현식·김두섭, 2014; 김흥주·박길태, 2010; 배은주, 2006; 서현·이승은, 2007; 오성배, 2005; 이애련, 2015; 이영주, 2007; 한금섭, 2003).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집단 내에 다양한 이주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이들의 성장 배경이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이주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보호자가 이주경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가운데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성장배경이 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27). 실제로 연보라(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출생자가 대다수 포함된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의 6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심리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등의 다각적인 영역의 발달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비(非)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발달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특정 집단의 우위나 열세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연보라, 2017: 134-135). 다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평균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의 경제적 열악함은 자녀의 학업이나 교우관계,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연보라, 2017: 128).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 등과 같이 자신이 이주 경험을 지닌 경우 대체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성취가 저조하고,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실제로 한국사회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26; 박혜준, 2008; 최경자·곽종문·채경희·박찬수, 2011: 4). 이와 같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내에서도 이들의 성장 배경이나 특성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이나 지원보다는 수혜자의 상황과 필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연보라, 2017: 136).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크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⁷⁾.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각 정책의 대상과 운영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수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최종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두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정책들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다음의 <표 II-1>에 제시하였다.

7) 주요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과 교육부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연계 정책으로 두고 있는데, 이에 정책의 추진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청소년 관련 활동 및 복지 기관/시설 등의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이수인 · 이순미 · 최지훈, 2019).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으로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9년 181개소).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미래 설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종합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경우 각 세부 영역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거나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수인 · 이순미 · 최지훈, 2019).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 · 정보 제공 및 자녀생활 지원(알림장 읽기, 숙제 지도 등),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술한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와 관련해서는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이나 진로 · 진학에 대한 온라인 교육정보를 방송통신대학교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를

위한 교육과 기초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 있으며,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운영 기관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고,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살펴볼 수 있는데,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가 그 예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리·정서뿐 아니라 진학과 진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까지 연계하는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마음돋보기', 'Job돋보기')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캠프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비언어적 활동 기반의 통합프로그램으로서 대인관계 향상 등의 사회성 함양을 위함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를 운영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코칭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파견할 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을 우대하여 선발 및 운영하고 있다.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무지개job아라(진로탐색)'와 '내-일을 잡아라(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로탐색 및 설계, 현장 체험학습 등의 진로탐색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직업소양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한국어 교육 및 직업 한국어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개소를 다문화청소년 특화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 특화 과정은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문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국민 및 청소년, 시설종사자, 대민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데,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트인 '다누리배움터'를 운영하여 관련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디어 등 일상적인 다문화청소년 차별, 비하 등 부정적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정·개선 권고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별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정보 및 정책·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특성화사업을 개편하여 예산을 통합하고 배분하는 것으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지역별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CYS-Net)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18년 10월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373명 지원).

그 외에 전술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도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돕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표 I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여성가족부)

영역	내용	대상	운영체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 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 입국자 대상 '레인보우스쿨'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
	무지개 잡아라, 내일을 잡아라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초한국어, 직업 한국어)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
학습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생활 지원)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 입국자 대상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운영(기초학과 교육)	만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
심리·정서 지원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대상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	만 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 및 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초기 입국자 대상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 프로그램)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

영역	내용	대상	운영체계
사회성·리더십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운영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 입국자 대상 'Rainbow School' 프로그램 운영 (사회관계 프로그램)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
	통합캠프(통·통·통캠프)운영	만 14세~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및 일반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교육	무지개 잡아라, 내일을 잡아라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위탁 운영기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운영 (미래설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훈련기관
다문화 수용성 증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온라인 사이트 운영	일반국민 및 청소년, 시설종사자, 대민 서비스 제공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및 미디어 환경 조성	일반 국민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중언어 및 글로벌 역량 함양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만16세~24세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부모 지원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서비스(부모교육)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운영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역	내용	대상	운영체계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를 통한 위기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모든 청소년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예산 통합 배분	모든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협의체를 운영	모든 시·도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만 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 및 부모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 출처 : 여성가족부(2018.03.0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웹페이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71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2018.03.06.),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웹페이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03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2019.07.09.),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여성가족부 웹페이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61hsid+qLf9FnutmgMVIqLcE.mogef10?mid=plc502&bbtSn=202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2)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수립을 시초로,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크게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03.05.).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표-II-2>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 중도입국 자녀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연계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취학 여부 조사 및 공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난민·무연고 아동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개별 학교 단위의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여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19년 222학급 예정), 한국어학급을 전담하는 강사 또는 정규교사(담임)를 배치하였다. 재학 중인 학교에 한국어학급이 없는 경우 인근 지역의 한국어학급이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시·도교육청)에서 한국어강사, 한국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단위인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시범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학습지원이나 학교적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예로 학교급 전환기에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징검다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생활영역(학교규칙, 생활습관)과 학습영역(학습습관, 동기부여)으로 구분하고 2019년 처음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20년에는 중학교 입학예정자까지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학습 지원도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대학 대학생과 초·중·고 다문화학생을 1:1 매칭하여 학습이나 숙제지도, 고민상담 등의 멘토링을 진행한다. 단,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의 이용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제한점을 지닌다.

근래에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영역의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학교 단위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2018년부터 이주배경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기초역량 지원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청소년 프로그램도 원격영상 멘토링과 같이 학교 단위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또 하나의 큰 영역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교원, 담당교원, 전문교원, 학교관리자로 구분하여 특화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학부모를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교육제도나 학교 편·입학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을 13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가정연계 및 학부모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이중언어학습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등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교육부의 지역기관 연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운영과 지역주민의 다문화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의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예컨대,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국제화 특구(시흥, 안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다문화교육지원단과 다문화교육센터(19년

17개)를 운영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연수나 현장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II-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교육부)

영역	내용	대상	운영체계
공교육 진입 지원	법무부 정보 연계를 통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대상 취학안내 강화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법무부-교육부- 시·도 교육청 연계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난민·무연고 아동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단위학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지원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유아)	한국어학급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학습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학교급 전환기 '징검다리과정' 지원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학생	초등학교 입학예정 대상 시범운영교 (27개 교)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사업	초·중·고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이용자 제외)	대학-단위학교 연계 (시·도교육청 협조)
진로교육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모든 학생	단위학교
	이주배경 청소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기초역량 지원 프로그램 보급	이주배경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단위학교
다문화 수용성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모든 학생	단위학교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교사	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습 장려를 위한 대회 개최 및 교재 보급	다문화학생 및 모든 학생	시·도교육청

영역	내용	대상	운영체계
학부모 지원	학부모 안내자료(13개 언어) 배포 및 학부모 대상 정책 홍보	다문화학생 학부모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가정연계 및 학부모 교육 활동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부모	단위학교
지역사회 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중점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시흥·안산	시·도 단위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모든 시·도	시·도 단위

* 출처 : 교육부a 보도자료(2019.03.05.),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웹페이지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9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하여 재정리함.

3. 소결 및 시사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공교육 진입부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학습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교육, 다문화 수용성, 이중언어교육, 학부모 지원, 지역사회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걸쳐져 있다. 또한 주요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의 기능들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수혜 대상도 다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처 간 상이한 전달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와 지역다문화교육센터에서 해당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중앙) 및 위탁 운영기관에서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 단위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이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업무영역에 따라 각각의 독립적인 전달체계 내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3.06.).

실제로 다문화 정책에서 분산되고 파편화된 서비스로 인해 유사·중복의 문제나 총괄조정 또는 협업체계 부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교육부, 2019a; 김이선·민무숙, 2010; 오성배·김현철·김성식·김재우·박새봄, 2013; 장임숙, 2013). 장임숙(2013)은 다문화가족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며, 체류, 노동,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개입주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부문 간에, 부문 내에서도 상호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 기관, 조직에 따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유사·중복 지원 등의 자원낭비로 인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장임숙, 2013). 실제로 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 시행 초기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해당 부처와 관련된 지자체 내의 여러 부서가 중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여성가족부, 2010, 장임숙, 2013 재인용). 이는 다문화 정책이 관 주도로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식 정책추진과도 무관하지 않다(최무현·김경희, 2015).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및 사각지대의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임숙, 2013). 또한 국정운영 방식에서 전 세계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역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 역시 중앙정부 외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차원의 다양한 다문화 관련 행위자들이 네트워크화되고 협업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최무현·김경희, 2015).

그리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역시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인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정책 및 사업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관련 노력들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정책학교 등의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도 민관학 지역협의체 운영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매우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단순한 협의회의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 협의체 역시 협의회의 이상으로 실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결망이나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이 가능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구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덧붙여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정책추진보다는 지자체 단위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조정하는 상향식 추진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분석

- 1.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에 따른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모델 특징
- 2.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 3. 소결 및 시사점

1.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에 따른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모델 특징

지역사회 단위로 시행하는 연계 지역기관 간 연계 지원사업 체계를 제시할 때 거버넌스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이때, 거버넌스는 기존 관료제 중심의 정부 개념과 차별화되면서 법과 제도, 시민사회 등과 같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 25).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와 연결하는 로컬 거버넌스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관리 방식의 일환으로서 조직 구조 뿐 아니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는 과거 중앙집권 방식의 하향식 정부체제에서 점차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이 증대되고 상향식 소통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 기관 및 시설 간의 연계 지원사업의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시행되는 기관 연계 지원사업 모델을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의 한계를 밝히고,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세 가지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자체 단위로 시행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 사례를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8) 3장은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함.

1) 거버넌스의 개념

로드스(Rhodes, 1996: 652-667)는 거버넌스를 정부가 변화하는 새로운 통치 과정으로 보았다. 거버넌스는 협의와 광의적 차원으로 구분된다(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107). 협의적 차원의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광의적 차원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42-43).

거버넌스는 국가나 시장체제와는 다르게 시민사회 중심으로 된 복합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권위체제 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포함한다. 동시에 점차 정부 중심의 공공기관 조직과 민간기관의 조직 경계가 약해짐에 따라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상호 협력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의 다주체 간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III-1 거버넌스 개념

협의	일반	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예산 등 내부통제를 대폭 완화 ·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권과 책임 부여 · 성과 향상과 고객 만족의 행정 관리 · 내부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 관리 기법의 공공 부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의 신공공관리 개념 (서비스네트워크)에 시장주의 추가 ·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결합 ·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기를 주장 · 신공공관리의 신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입장 대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일반적 의미의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한 개념 · 정부 재창조 관점에서의 기업가적 정부 의미 포함

* 출처: 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108 재구성

오스본과 개블러(Osborne & Gaebler, 1992)는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행정은 과거 전통적 관료체적 관리에서 벗어나 촉진적, 지역사회 주도적, 고객지향적, 기업가적, 예방적, 분권적, 시장지향적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22 재인용). 이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의 협력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연결된다.

표 III-2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 비교

기준	전통적 행정(관료제 정부)	거버넌스(협력 네트워크 정부)
정부역할	직접 동력을 움직이는 역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정부활동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동력 제공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서비스 제고에 경쟁방식 도입
관리방식	규칙 중심 관리	임무 중심 관리
예산제도	투입 중심 예산	성과 연계 예산
행정가치	관료중심 지출지향 사후치료	고객중심 수익창출 예측과 예방
행정주체	집권적 관료제	참여와 팀워크
행정방식	명령과 통제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
주요 운영기제	행정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 출처 : Osboene & Gaeble, 1992. 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22 재구성

한편, 거버넌스는 분석의 수준과 단위, 주체, 대상, 내용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분석 수준에 따라서는 국가 간 협력, 문제해결과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에서의 시민참여와 지역발전과 관련된 로컬 거버넌스 등이 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 디지털 거버넌스, 그린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NGO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되고, 내용에 따라서는 기업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좋은(good) 거버넌스로 나누어진다.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구분한다(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108-109).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에 중심으로 행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로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비교를 통해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

(1)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과거 정부체제에서 많이 적용되었던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시장 및 시민사회와 민주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편, 국가가 중심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를 중심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며,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체제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앙집권적 방식과 지방분권적 체계가 공존한다. 더불어 운영 과정에서 다중적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형태는 시민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민 참여도 허용하지만 시스템 상 국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2)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공공적 결정과 집행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을 매개로 하는 시장원리에 기반한다. 즉, 정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역할보다는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원리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를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중심적인 공공 관료제에서 행정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보다는 민간이나 하위 기관으로의 분권화에 따른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체계를 주장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는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공적인 서비스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주의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라 과도한 분권화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가 필요한 정책 설정과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회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이 소홀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유형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는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앞서 제시한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더불어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분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참여에 기초한 분권화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시행하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 행정 권력으로 인한 일방향적인 지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부 구성원들이 지닌 현장에서의 경험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 운영 및 집행에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또한 제습(B.Jessop)의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도 연결된다(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33). 이는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집단들을 주체로 자율적 자기 결정과 관리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기존의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나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다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한계를 보였다. 반면,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증대하고 자기 결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조정, 합의, 협력 등의 행위와 의사결정 참여 주체들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 유형으로 구분된다(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 25).

(1) 사회-정치 거버넌스

정부는 공식적인 권위에 따라서 정치적 행위로서의 가치 배분이 일어나는 반면,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 간의 공유된 목적에 따른 합의에 의해 한정된 자원의 가치가 배분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공공 행위자, 대상,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실행되고, 균형이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정치 거버넌스도 신뢰와 상호이해관계에 따라 주체별로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자원 배분은 특정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 목표에 따른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걸쳐 산출물을 제공한다(Kooiman, 1994: 258).

사회-정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 간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와 패턴은 행위자의 행동 결과로 발생하고, 거버넌스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권력 차이에 따른 주체자의 힘의 능력이 아닌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신뢰를 주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정치 거버넌스 모델은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원화된 민주적 사회 구조 내에서 주로 작용한다.

(2)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다음은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가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및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자기조직적 네트워크는 국가 중심적 또는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로드스(Rhodes, 1996)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며 자기 주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형태에서는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율성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조직적 네트워크는 신뢰와 협동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해 가면서 국가 중심적,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형태에서의 주체의 역할과는 차별화된다(Thompson et al., 1991: 15, 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38 재인용).

(3) 참여적 정부 거버넌스

참여적 정부 거버넌스는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유형을 토대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보다는 시민 대상의 정보 접근과 정책에 대한 관심, 현장 적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 정부 거버넌스에서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을 목표로 한다. 참여적 정부모형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공무원과 시민의 협력은 공익의 증대에도 연결된다.

한편, 이와 같은 참여적 정부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가 개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민과 공무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상호 간의 교류가 선행되었을 때 본래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가 갖춰졌을 때 참여적 정부 거버넌스는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김석준·강인호·김정렬·강제상·문병기·이종열 외, 2002: 40-41.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4)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1)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의미와 유형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또 다른 유형으로 민간 조직 및 기관에 정부의 역할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제 형태의 정부 형태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Rethemeyer, 2005: 118).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중층적인 이해관계 상에 놓여 있는 주체들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제기한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서 에그라노프(Agranoff, 2007)는 공공관리 네트워크가 의도적으로 형성되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체제로서 비계층적인 권위구조에 의존하면서 다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진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일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안셀과 가쉬(Ansell & Gash, 2007)는 다수의 공공 기관이 공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기관의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 2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정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었는데 주로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의견 충돌 및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 25). 실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기관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연계 지원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체간의 이익과 손해 배분 방식과 공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기관 간 연계 지원 사업 모델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복지 네트워크 구성·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2)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모델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모델과 관련한 이론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해당 이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복지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절차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단계부터 네트워크 기능의 작용에 따른 효과성까지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모델과 연계되는 사회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환 이론에서 네트워크의 시작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최균·장영신, 2013: 215). 이는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통합된 복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및 조직협력망의 구성을 강조한다. 특히, 복지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역별로 분절화된 정책 서비스 시행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이 때 발생하는 사회교환은 참여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과 조직 간에는 정보 공유, 프로그램 협력, 문제 해결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자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상호조직이론(Inter-organizational theory)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기관 및 단체 간에 발생하는 조정과 협력 과정이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Hardcastle, Wenocur, & Powers, 2004; 최균, 장영신, 2013: 215 재인용). 이는 앞서 제시한 사회교환이론에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으며, 조직과 조직 간의 자원 교환과 대상자 간의 통합적 연계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단위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극대화를 강조한다(이태수·강창현·김신렬·류만희·민현정·정홍원 외, 2007; 최균·장영신, 2013: 216 재인용).

세 번째는 사회자본 이론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한다는 기본적인 논리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때 사회자본은 개인 단위가 아닌 사회 구조 내 관계를 토대로 발생한 네트워크 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 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구성원의 연대를 기본 논리로 삼는다.

지금까지 제시한 세 가지 이론을 토대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요인과 분석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III-3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분석 틀

접근이론	주요 요인	분석 요소
사회교환이론	조직 간의 교환자원	사회복지 관련 자원 활용
상호조직이론	조정, 협력	신뢰강화를 위한 기회제공 횟수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
사회자본이론	신뢰	의사결정의 민주성(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 민간자원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 출처: 최균·장영신, 2013: 218 재인용.

2.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역사회 연계 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방과후돌봄체계 모델을 통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돌봄 지원 서비스 정책이 지역사회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모델로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 교육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끝으로,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을 통해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인프라를 연계 하여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델 사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 지원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거버넌스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 방과후돌봄체계 모델

방과후돌봄체계는 중앙단위에서 지역사회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부처에 따라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형태로 구분된다. 또한 중앙단위에서 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군·구 단위의 돌봄지원협의회와 돌봄실무추진팀, 지자체 돌봄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체계로 연결되는 모델 형태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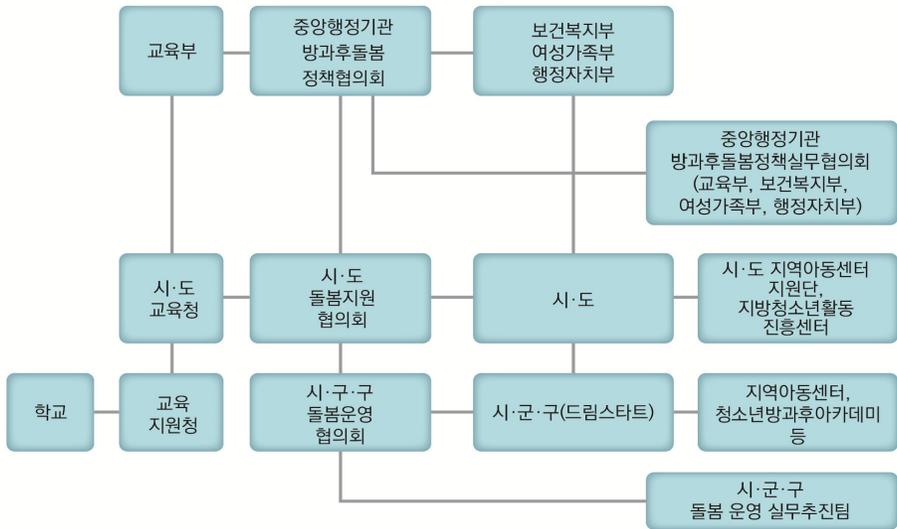
행정 단위	주관	주요 기능·업무	관련 부처·기관
중앙 돌봄정책협의회	부처공동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조정·협력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시·도교육청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협력·조정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유관단체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돌봄실무추진팀	교육지원팀	종합적 돌봄 수요조사 돌봄대상 파악·선정·조정, 배정 지역단위 돌봄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등
돌봄기관 돌봄기관네트워크	지자체 (드림스타트), 교육지원청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기관 간 정보공유	학교, 지역이동센터, 학부모단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드림스타트 등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p. 14.

그림 III-1 돌봄협의체 운영 체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각 부처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위원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움직임도 동시에 꾀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약의 변경과 해지, 결정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돌봄 지원 운영 협의체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순환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돌봄 기관 간의 인력, 시설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돌봄 기관 및 시설별로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마련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 프로그램 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시·도 지역사회 돌봄지원협의회는 시·도 교육청과 시·도광역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담당자, 그리고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돌봄지원협의회는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담당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기관 및 시설 운영 주체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방과후돌봄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조정을 포함한 지원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 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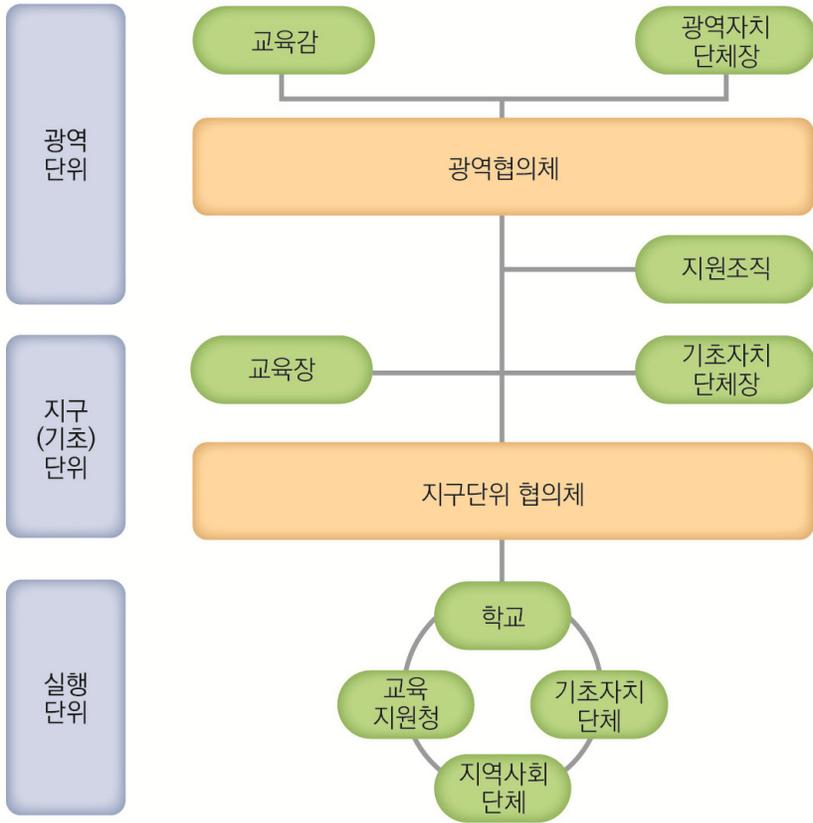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p.15.

그림 III-2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2) 혁신교육지구 모델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정한 절차에 따른 협약을 통해서 교육정책 및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한 지역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경기도가 2011년부터 도입한 혁신교육지구정책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공교육의 혁신을 위한 목표를 설정 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존의 개별적인 사업 단위별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지원으로 지속 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경기도의회, 2015; 이윤주·오해섭·김인주·강지원·백승주·성지은 외, 2018: 21 재인용).

혁신교육지구 모델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차원의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토대로 지역사회 마을 교육공동체와 청소년 및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두 개의 핵심 기관을 축으로 역할을 수행 하면서 상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실행단계에서는 학교급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중심 지원 정책에 그치고 있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 출처 : 이윤주·오해섭·김언주·강지원·백승주·성지은 외, 2018: 25

그림 Ⅲ-3 시·도별 혁신교육지구 운영체계

3)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모델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청소년 안전망')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자원을 모두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며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의 서비스를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전화, 문자,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및 각종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으로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교급별 각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다.

지원서비스 절차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안전망 필수 연계 기관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기청소년 지원을 의뢰한다.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세부적인 운영 절차는 각 기관별 특성에 맞춰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의뢰받은 이후, 발견단계 → 파악단계 → 타진단계 → 의뢰단계를 공통적으로 거친다. 그 다음,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단계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 시설 등을 통해 접수 → 파악 → 제공 → 종료 단계를 걸쳐 진행된다. 종료단계에서는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서비스를 지원한 이후에 허브 기관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피드백 절차도 거친다.

표 III-4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 체제

구분	내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의 지역별 인프라 편차 및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운 측면이 발생함. 따라서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을 구축·운영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세(위기) 청소년
<p>청소년 안전망 (구. CYS-Net) 서비스 체계 및 세부내용</p>	
시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출처 : 여가부, 2017; 이윤주·오해섭·김언주·강지원·백승주·성지은 외, 2018: 25

청소년안전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에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 연계 지원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된 점이다. 상황별 위기청소년 연계 지원이 가능하여 범죄, 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신고가 필요한 상황,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 및 쉼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그 밖의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모형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 기관 네트워크 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추후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지원 네트워크와의 연계방안을 위한 모색이 요구된다.

3. 소결 및 시사점

1)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앞서 제시한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선행연구와 모델 사례 등을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 25). 다음 특징들을 토대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형을 개발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 모델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 사업이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유형 가운데 참여적 정부 거버넌스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관이나 조직이 플랫폼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재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환되는 초기 단계 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및 시설이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허브역할로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조직과의 협력을 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를 시행하는 현장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교육공동체나 NGO 단체, 마을협동조합 등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지원 주체로서 민간 조직 및 단체는 협력 거버넌스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주체 이기에 공공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라 할지라도 민단 단체와 조직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운영주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협의체에 참여하는 운영 주체들은 단순한 자문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매개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지원 영역별로 설치된 협의회나 협의체의 경우,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내 지원 주체 기관 간 소통을 거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동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형식적인 협의체와 협의회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계사업과 프로그램, 정책 부서, 기관, 조직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구성되고 기획,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관장 중심의 협의체 또는 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실무자 중심의 그룹도 운영함으로써 정책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협력의 대상이 정책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관리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드백 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들 수 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운영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협력 기관 및 조직 간의 참여가 권한과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췄을 때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 제안이나 협력구상 이상의 실제 운영과 결과에 따른 관리, 보상, 책임까지도 공유하고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본 협력 방안

본 절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으로 방과후돌봄체계, 혁신교육지구,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모델 모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구성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관련 기관 및 조직 주체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Weiss, 1987: 102). 먼저, 협력 과정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공동의 문제 또는 이슈가 존재해야 한다. 방과후돌봄체계, 혁신교육지구, 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존재하였다. 하나의 예로, 방과후돌봄체계의 경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였기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이 시도되었다.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을 구성할 때에도 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동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방과후 돌봄 체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단위로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장을 매개로 삼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다양한 영역 간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함으로써 공동 목표 및 운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존재하는 공공, 민간 기구 및 조직과의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청소년안전망(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서 지자체뿐 아니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관 및 조직(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 단위로 존재하는 민간단체 및 시설, 마을교육공동체 등과도 연계해 가면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기관 중심의 인프라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안전망(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네트워크 연계는 되어 있으나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행동적 변화를 보여줄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연계성이 약하게 작용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 지원모델을 구축할 때는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촘촘한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합동지원 협의체 및 중앙지원단 그리고 컨설팅단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협의체 또는 위원회로 나타나는 제도적 절차를 의미한다.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로서 광역 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조례 등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일 경우, 대체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MOU) 등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되는 혁신학교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부 훈령 제35호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실행 주체별로 역할을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교육 성장을 목표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끝으로, 외부로부터의 유인(예: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이 존재하였을 때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공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협력을 이끌어 낸다고 할지라도 지역사회 기관 및 조직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동기부여, 즉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이는 행정 안전부 주최로 시행되는 지자체 대상 민관협력거버넌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자체 단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공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도 우수 민간협력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외적인 동기 요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IV.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 1. 국내 지역기관 지원사업 사례 분석
- 2. 해외 지역기관 지원사업 사례 분석
- 3. 소결 및 시사점

1. 국내 지역기관 지원사업 사례 분석

1) 서울

(1) A기관 현황

서울 A지역의 A기관은 A시 유일의 중도입국 청소년 중점지원 기관으로 2015년 9월에 개소했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22개국 705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해 올바른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이 본 기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점 운영방향으로는 첫째, 한국사회 적응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교육사업, 둘째, 글로벌 문화 및 역사 이해활동,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넷째,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다.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중국동포가 많으며, 최근 재혼한 베트남 여성의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9) 4장은 최영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함.

(2) 지원사업

A기관은 첫째,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상설과정과 정규과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정규과정의 경우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 한국어 학습을 개설한다.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주6-10시간 10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반면 상설과정의 경우에는 7인 미만의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해 지도하며, 수시 평가를 통해 진도 조정 및 재구성을 한다.

둘째, A기관의 검정고시 지원의 경우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학력취득을 필요로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정고시 대비 과목별 학습을 지원한다.

셋째, 맞춤형지원으로 상담서비스, 개별서비스,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관에 등록된 청소년과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을 구별하여 지원하는데, 미등록자의 경우 이용상담 및 정보제공이 주를 이룬다.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거주지 주변 한국어 교육기관을 안내하며, 공교육 편입학 절차 등을 안내한다. 반면, 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상담, 생활상담, 진학상담 등이 지원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양한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에는 귀화시험 대비교육, 영어교육, 교과목 학습지도, 토픽시험 대비 교육, 중국어 상담, 한국 문학 지도, 진로교육 보드게임, 직업현장탐방 등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국사회 이해교육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데, 주로 한국의 사회·역사 학습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다른 나라의 사회·문화 학습을 지원한다. ‘어바웃 한국’, ‘편리한 한국’, ‘예의 바른 한국’, ‘민주주의 국가 한국’, ‘꿈을 이루는 한국’으로 구분해 주로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근현대사 박물관 등 현장 탐방을 실시한다.

A기관의 경우 모기업과 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데, 기관의 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별적,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관 이용자의 약 70%가 한국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육청과 연계해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로 편입한 이후 부모와 학생의 의지가 없으면 기관에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 진입 후 중도 탈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및 지속적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 지원사업 현황(2018)

구분	내용
한국어 지원	·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지도
검정고시 지도	·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
상담서비스	· 개인에게 알맞은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개별서비스	· 귀화시험 대비교육 · 영어교육 · 교과목 학습지원 · 토픽시험 대비교육 · 중국어 상담 · 한국문학 지도 · 진로교육 보드게임 ·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한국사회 적응	· 무단투기 예방교육 · 마을 정화 활동
	· 어바웃 한국 · 편리한 한국 · 예의바른 한국 · 민주주의 국가 한국 꿈을 이루는 한국 ·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소속감 형성

* 출처 : 온드림센터, 2018

(3)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2017년 A기관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 방송사, 공공기관, NGO,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계사업의 내용은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및 직업, 여가, 교류, 한국생활 적응, 건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원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들은 부족한 자원을 자원 연계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 연계는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일방향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관 간 연계는 A기관과 연계기관과의 상호교류의 측면이 아니라 A기관에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일반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봉사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봉사활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멘토-멘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적자원을 제공받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확보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2 연계사업 현황(2017)

연계사업	목적	기관
학습지원	· 영어회화, 교과목지도	연세대학교 CIEE
	· 스토리텔링 및 글쓰기 교육 · 손그림 드로잉 교육	SC미디어협동조합
	· 학습 및 정서 멘토링 · 심리지원, 교사·학부모·학급 교육	드림투게더
	· 학습 및 정서지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심리정서	·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꽃꽂이 교육	와일드디아
진로 및 직업	· EBS 스튜디오 투어 · 한국문화 체험 및 교류	EBS
	· 요리사, 파티시에, 바리스타, 소콜라티에 등 직업체험	서울시립구로청소년 수련관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취득 교육	한국이민재단
여가	·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야구연습 및 관람, 경기 등	계명복지재단
	· 댄스 및 사물놀이 지도	바른사회시민회의
교류	· 한국 청소년과 함께 한국문화 체험 및 교류	독산고등학교
한국생활 적응	·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범죄피해 예방 · 심폐소생술교육	영등포경찰서
	· 돈 관리의 중요성 ·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등 금융 경제교육	IBK행복나눔재단
건강	· 무료 치과 검진 및 진료	(주) 제니튼
기타	· 미디어교육	모아스토리

* 출처 : 온드림센터, 2018

현재 A기관의 영역별 기관 연계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A기관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해당 기관이 A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관들 사이에 공통의 영역이 있기보다는 다소 분절된 상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상호 유기적인 연대 및 공동사업 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연계기관 발굴 시 지속사업으로의 가능성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계기관과 A기관이 서로 자원을 주고받는 형태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A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들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관과 기관들 간의 분절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 연계사업 현황(2017)

실제로 A기관에서 발표한 2017년과 2018년의 연계사업을 비교해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연계되어 있는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2017년과 2018년 2개년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5개 기관과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나 2018년 연계 지원사업 현황에 나온 기관은 4개 기관이었고, 2018년 새로운 연계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2018년 연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연계사업에서 일회성 사업이 5개, 단기성 사업이 6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3개로 파악된다. A 기관은 이주배경 청소년 기본사업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새로운

연계기관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계기관과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연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연계의 지속성과 유기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사업발굴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V-3 연계사업 현황(2018)

연계사업	목적	기간	기관
학습지원	· 영어회화, 교과목지도	- 주1-2회 진행	연세대학교 CIEE
	· 시민사회 교육 진행	- 5-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학생 멘토 재능 나눔	- 10월-12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초등학교/중학교 교과목 학습지원	- 2월-8월	영등포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심리·정서	· 상담 실습 연계 · 심리상담 지원	- 1월-12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 플라워아트	- 1월-12월	와일드디어
진로 및 직업	· 대학교 진학 관련 상담	- 11월	한국진로진학정보원
	·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	- 12월	아이들과미래재단
교류	· 중도입국/한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 6월-11월	(사)청소년통일문화
	· 한국과 중국 출신 청소년들이 함께한 도전골든벨 및 문화교류	- 10월20일	GK희망공동체
건강	· 무료 치과 검진 및 진료	- 4월1일/22일	(주) 제니튼
	· 무료 진료	- 8월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꿈씨봉사단
기타	· 장학금 지원	- 2월27일	현대차정몽재단
	·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 5월17일/ 8월29일	영등포경찰서

* 출처 : 온드림센터, 2018

2. 해외 지역기관 지원사업 사례 분석

1) 독일

(1) 유입배경 및 현황

독일은 대표적인 후발 이민국가로서 비교적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본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규모 노동이주가 시작되었는데, 1955년부터 1960년 이후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와 국가 간 고용협약을 맺어 저숙련 외국 인력이 한시적 노동자로 유입되었다(Borjas, 1991; Carlin, 1996).

당시 독일로 이주한 초청노동자(일반적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를 일컫음)는 한시적인 이민자로 '귀국'을 목표로 한 본국 귀환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청노동자의 단기순환 원칙¹⁰⁾과 본국귀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장기체류 손님노동자들의 가족 재결합이 허용되면서 독일사회의 이민자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5년 새이민법을 제정한 것은 독일이 이민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계기가 되었다. 단일민족국가 정체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나, 민족분단과 통일, 구소련 연방의 붕괴를 겪으면서 귀환동포들(Ethnic Germans)이 주요 이민자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최영미, 2015). 2006년 독일 총리 메르켈이 제창한 국가통합계획(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이 이민자 통합정책의 근간이 되고, 그 실행 계획이 구체화됨으로써 언어 및 통합교육의 개선, 직업적 훈련기회와 공적 직무 기회의 확대 등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0) 독일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한 외국인인은 다시 출국하게 되고, 새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Tränhardt, 2001).

2018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이주배경인구(부모 중 한 명이 적어도 이민자인 경우)는 2,080만 명에 이르렀다. 마이크로센서스에 따르면 적어도 전년에 비해 2.5%p가 증가한 수치이다. 가구의 주요 언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터키어가 17%, 러시아어가 16%, 폴란드어가 9%, 아랍어가 7%로 나타났다¹¹⁾.

한편 독일의 장·단기 외국인 유입현황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민의 경우 인도주의 장기이민이 2015년 20.9%였던 반면, 2016년 41.3%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시리아 내전 사태로 인해 독일로 유입된 난민신청자의 증가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 정책

(가) 연방정부

2007년 독일은 ‘국가통합계획(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을 발표했고, 연방정부·주정부, 이민단체 및 비정부기구가 통합적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였다. 이주민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세부적으로는 교육, 직업교육, 노동시장, 사회적 책임, 학문,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통합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가통합계획(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과 ‘국가통합실행계획(Der Nationale Aktionsplan Integration)’에서 특히 이주민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강조하였으며(Die Bundesregierung, 2007; 2012), 이들의 사회통합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는 것이 교육정책이고¹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Die Bundesregierung, 2007; 2012).

11)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_inhalt.html(최종검색일: 2019년 12월 9일)

12) 이주민 자녀 교육정책은 연방부서, 주 교육부 장관회의, 이주민통합과 교육 관련 재단, 협회 등이 합의하였다.

이주민 자녀 교육정책은 (직업·평생)교육의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내 이주민의 인력증원, (직업)교육, 워크숍, 재교육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주민 학부모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 자녀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며, 이주민 자녀의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 연구 개발을 위해 이주민 자녀 관련 교육통계를 전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Die Bundesregierung, 2007; 2012).

표 IV-4 이주민 자녀 교육정책의 목표

(직업, 평생) 교육의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내 이주민 인력증원 • (직업)교육, 워크숍, 재교육의 지속적 지원 • 이주민 학부모 협력강화 • 이주민 단체 활성화 • 주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강화 • 직업교육 강화
개인별 지원, 교육 과도기 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선주민 자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 격차 해소 • 이주민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지원
교육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자녀 관련 교육통계 개선 • 교육수준 평가와 개발 • 교육운영과 정책결정 과정 개선

* 출처 : Die Bundesregierung, 2007; 2012

외국인의 독일 귀속 후 사회적 계층하락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2012년 4월 1일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 검증 및 인정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Feststellung und Anerkennung im Ausland erworbener Berufsqualifikationen, BQFG)’이 발효되었다. 법률 제정의 목적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사회통합과 독일의 인구변화 및 노동시장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독일 연방의 여러 주에서는 특히 교사,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및 엔지니어와 같은 직업군에 대한 법적 검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주의회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¹³⁾.

BQFG의 적용 대상은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이주민이다. 후기재이주자에게는 '추방자 및 난민 문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험과 자격증명법'도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 증명서를 소실한 경우 독일 내 관련 관청에서 시험 또는 다른 방식을 거쳐 직업능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¹⁴⁾. BQFG는 연방 최초로 이주자의 직업교육 내용과 기간 및 해당 경력을 토대로 동일자격 검증을 위한 일원화된 평가기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동일자격 검증 결과는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 자격 재취득 방식을 취한다¹⁵⁾.

한편 유럽 사회기금(ESF)은 외국인 이민자의 노동시장 초기진입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다. 유럽 사회기금이 후원하는 사회통합 프로젝트는 특히 복잡한 이력을 갖는 장기 실직 이주자의 근로능력 개선이나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 이주경력으로 인해 장기 실업 또는 취업에 불리한 재이주자가 독일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최대 난관은 독일에서의 직업 관련 소프트 스킬과 핵심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ESF는 이들이 새로운 사회 및 직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향상과 수입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¹⁶⁾.

13) Hessisches Sozialministerium Landesbeauftragte der Hessischen Landesregierung für Heimatvertriebene und Spätaussiedler (2014): Heimatvertriebene und Spätaussiedler. Bericht der Landesbeauftragten der Hessischen Landesregierung für Heimatvertriebene und Spätaussiedler 2009-2014, S. 19.(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2일)

14) Bundesamt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10 Prüfungen und Befähigungsnachweise. (http://www.gesetze-im-internet.de/bvfg/_10.html)(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2일)

15) <http://www.gesetze-im-internet.de/bqfg/index.html>: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2018): Spätaussiedleraufnahme im Freistaat Bayern. Zugang, Unterbringung, Integration, S.10.(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3일)

16) Ebd., S.9.

최근 몇 년 동안 독일¹⁷⁾은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 특히 EU 국가와 전쟁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충분히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가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독일의 전문 노동자 부족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격인증을 통한 통합(IQ)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주민들의 노동시장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 시작하였다. 2015-2018년에는 “인증법에 의거한 ESF-자격인증”을 중점에 둔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해외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수료)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교육에 적합한 취업으로 이어진다.

독일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데, IQ 지원은 다양화된 사회를 추구하는 독일이 이주민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격차를 줄여 이주민들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주민들이 가진 다문화적인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Q 프로그램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IQ 프로그램의 자세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지역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16개 지역 네트워크의 핵심과제이다. 핵심과제는 주로 각 주가 관리하며, 다른 운영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외 자격인증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승인 및 자격 부여 관련 자문을 지원하며, 나아가 이주민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 상담, 트레이닝을 받아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달한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외에 독일 전 지역의 이민자 관련 주제를 다루는 5개의 IQ 전문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격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방안, 이주민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권고사항을 결정하기도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IQ Multiplikatoren 프로젝트 인도(MUT IQ)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MUT IQ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수행 경험을 공유하며, IQ 지원

17) <http://www.netzwerk-iq.de/>(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2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 부서와 함께 IQ 사업의 결과를 각 부처, BA 그리고 분야 홍보물에 알리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노동 및 사회부(BMAS)와 유럽사회기금(ESF)의 자금으로 지원되며, 연방 교육 및 연구부(BMBF)와 연방노동청(BA)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2) 주정부-바이에른

독일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정책에 관해서 자치권의 원칙에 따라 주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김상무, 2010). 따라서 주정부가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성인교육에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제에 관해서는 연방·주정부,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정수정, 류방란, 2012).

바이에른에서도 연방이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이 지원하는 무료 통합과정이 시행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주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의 무게중심을 독일어 학습 촉진에 두고 있다. 이것은 2017년 11월 16일자로 발효된 후기재이주자·외국인 상담 및 통합에 관한 규정(Beratungs- und Integrationsrichtlinie, BIR) 2.3호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¹⁸⁾. 바이에른에서도 이에 준하여 바이에른 소재 일반학교 1~10학년 과도기반이나 독일어 촉진반에 재학 중인 후기재이주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켜 신속하게 일반반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방과후 숙제도우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2016/2017학년도에는 약 16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여 1,458명의 학생들이 숙제도우미 서비스를 받았다.

18)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VV_265_A_554-1#BayVV_265_A_554-9(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둘째, 후기재이주자들은 하우프트슐레 졸업 또는 하우프트슐레 중등과정(M10) 수료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 특별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독일 중등학교 졸업에 요구되는 영어실력을 갖추지 못한 후기재이주자가 중등 졸업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의 지원으로 과거 거주국가 언어로 진행되는 원격 영어시험을 칠 수 있다. 또는 9학년과 10학년에 중등반에 등록할 때 미리 졸업자격 시험응시 신청을 해도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영어 지식을 습득할 수 없었던 후기재이주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제정된 특별규정으로써 상급학교에도 적용된다. 또한 독일어 시험에서도 후기재이주 청소년은 양육권자가 신청할 경우 하우프트슐레 졸업을 위한 독일어 시험을 '제2언어로의 독일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독일 학교에 다닌 경험이 6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김나지움과 콜렉에도 후기재이주자 및 유대계 이주자들을 위한 특별도제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도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최소 중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오토 베넵케 재단의 중앙독일어시험 C1 합격증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도제과정을 2년 이수한 후에는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후기재이주자 가정의 학생들은 초·중·고 연방장학법과 대학교육 보증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도제과정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상담과 지원은 오토 베넵케 재단이 담당한다.

셋째, 독일에서는 2012년 4월 1일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 검증 및 인정 개선을 위한 법률'의 발효 후 바이에른도 주법률로 인정된 직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 사정체계를 수립하여, 2013년 8월 1일 '외국 직업자격 동일수준 검증에 관한 바이에른 법(Bayerisches Berufsqualifikationsfeststellungsgesetz, BayBQFG)'을 시행하였다. 외국에서 직업자격을 취득하고 바이에른에서 그에 상응하는 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이 법률에 따른 자격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다.

(3)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1) JMD-독일 전역 450개 이상의 지역 상담소

JMD는 이주청소년지원센터로서 기본적으로 12-27세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 직업, 사회 통합 과정에 관한 개별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담당한다. 개별적 지원, 그룹 및 교육의 기회는 물론 학교, 직업교육 기업, 통합 과정 교사, 청소년 보호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또한 JMD의 주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BMFSFJ)와 함께 이주배경 청소년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는 ESF의 모델 프로그램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시키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니셔티브는 시작이 어려운 청소년들과 이민자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사회, 학교 그리고 직업에 통합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JMD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는 사회참여와 연결되어 미래 독일사회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JMD는 공공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미래 자원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독일 사회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준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직업교육 단계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통합지원 계획에 따라 장기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특별한 지원 요구가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이 진로계획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원은 각 자원봉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며, JMD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도록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출처 :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en/>(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0일)

그림 IV-2 JMD 지역상당소

JMD의 홈페이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 JMD를 검색해 찾을 수 있다.

2) Bildungskette: 교육체인 이니셔티브¹⁹⁾

(1) 연방정부, 연방노동청, 주정부의 긴밀한 협력

2010년 연방 교육 및 연구부(BMBF)는 학교-직업교육 사이의 과도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집단 학생들²⁰⁾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19) <https://www.bildungsketten.de/de/235.php>(최종검색일: 2019년 12월 9일)

직업 세계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니셔티브를 발의하였다(정수정·최순중, 2015).

연방 교육 및 연구부(이하 BMBF), 연방 노동 및 사회부(이하 BMAS), 연방 노동청(이하 BA)은 주정부와 함께 독일 전역에 적합한 성공적인 지원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졸업과 연결-직업교육 종료까지의 교육체인(Abschluss und Anschluss-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직업탐색 및 과도기 과정에 맞는 연방과 주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

교육체인 이니셔티브는 직업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직업을 준비하는 직업탐색 과정은 이른 시기에 시작해야 효과적이라는 기초하에 조기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은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한다. 잠재력 분석, 직업탐색, 직업 입문 지원, 자발적 코칭, 직업전환의 방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직업탐색부터 직업훈련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중앙문서에 기록 되는데, 이러한 문서화 작업은 직업선택패스, 직업탐색에 유용하다. 교육체인 이니셔티브는 연방과 BA, 주가 더욱 협력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연방과 BA, 주정부는 학교에서 진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협약을 맺는다²¹⁾.

20) 졸업장이 없는 졸업생의 비율 또는 직업훈련이 가능하지만 수료하지 못한 청소년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직업훈련을 최대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2010년 빌둥스케테 이니셔티브를 내각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1) 다음의 각 주는 협약에 서명을 하였다. Hamburg, Hessen, Rheinland-Pfalz, Nordrhein-Westfalen, Thüringen, Brandenburg, Baden-Württemberg, Mecklenburg-Vorpommern, Bremen, Sachsen, Bayern, Niedersachsen und Berlin),

진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지원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직업탐색을 하게 되고, 체계적인 과도기 과정을 거쳐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직업 및 심화교육을 위해 연방정부, 연방노동청, 주정부는 긴밀하게 연결된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연방의 지원정책은 교육체인 이니셔티브의 관할 아래에서 각각의 주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청소년들은 직업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게 되고, 독일 전역의 모든 학교에서(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직업탐색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받는 데 이용된다.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학교, 고용기관, 직업센터, 청소년 보호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협력 모델 중 하나가 “한 지붕 아래”(unter einem Dach)이다.

모든 지원 활동의 중심은 청소년이며, “사후 교정 대신 사전 예방”이라는 지원 철학에 따라 청소년들의 강점과 능력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도구로 활용되고 직업교육 중도이탈 및 졸업 연기 등을 최대한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체인 네트워크는 교사, 직업상담사, 취업동행자, 자발적 코치, 직업교육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00개 이상의 직업군에서 다양한 직업교육기회의 교육체인과 연계되어 있다.

BMBF 2010은 연방정부-주정부-BA-동반자 그룹과 함께 전체 교육체인 코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부터 BMAS와 함께 공동책임으로 운영하였다. BMAS의 대표자, 16명의 문화부 장관(Kultusministerien der Länder), 경제장관회의(der Wirtschaftsministerkonferenz), 노동장관회의(der Arbeitsministerkonferenz), 연방노동청(der Bundesagentur für Arbeit)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체인의 센터는 독일 본(Bonn) 지역의 직업교육연방연구소(BIBB)에 자리 잡았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원과 이니셔티브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며, 연방노동청의 직업선택패스를 담당한다. 지역 파트너와 함께 교육체인의 센터는 관계부처와 실무자 간의 정보교환의 장소,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경험 및 지식 교환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2) 새로운 소통 및 작업플랫폼 “Uberaus”에서의 네트워킹

교육체인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전문가와 협력 지원 프로그램의 활동가들은 가상커뮤니티인 “Uberaus”에서 새로운 소통 및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는 qualiboXX, Good Practice Center und LänderAktiv의 직업교육을 위한 연방연구소의 서비스들을 공유한다. 아이디어 소개, 주제 결정, 다른 실무자와의 의견 교환 등을 이루어지며, 교육체인 서비스 센터는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체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밖에 “Uberaus”는 양방향의 멀티미디어 교육서비스를 청소년들과 취업동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내용을 보강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IV-3 “Uberaus” 홈페이지 22)

22) <https://www.ueberaus.de/www/9.php#/www/index.php?sid=2988025988117046753938253825330>(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교육체인 이니셔티브²³⁾는 청소년이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청소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강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7학년부터 직업교육 수료 시까지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은 청소년들이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조기에 직업탐색을 수행하여 직업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직업체인 이니셔티브 담당자는 일반학교에서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교육체인 이니셔티브의 서비스와 지원 방안은 연방정부의 직업 및 학업탐색 콘셉트와 통합되어 있다. 대상은 주로 중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주에 따라서 직업 및 학업 탐색을 위해 김나지움 과정에 있는 학생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3) Bildungskette 과정²⁴⁾

7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력 분석은 본인의 강점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며, 청소년들이 의식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탐구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들이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는 기초하에 출발하여, 팀플레이어, 손재주, 예술적 재능 등 본인만의 다양한 잠재력을 분석함으로써 스스로의 강점과 관심사를 발견하여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적, 사회적,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청소년 개인이 직업과 관계된 능력을 더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발전 나아가 체계적인 직업탐색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가능한 모든 일반 교육 학교에서 잠재력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주에서는 이 방법을 직업탐색 계획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잠재력 분석을 위해서 연방 교육부 및 연구(BMBF)는

23) <https://www.bildungsketten.de/de/1567.php>(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0일)

24) <https://www.bildungsketten.de/de/1573.php>(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3일)

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출간하였으며, 이 매뉴얼에는 진행과정, 예시, 방법,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청소년들은 잠재력 분석을 통해 실천활동을 마친다. 학생들은 수공업 활동(예를 들어 나무와 공구 다루기) 또는 그룹 활동(예를 들어 종이도시 만들기)을 자주 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에서 관찰된 강점들을 알려 준다. 함께 참여하는 교사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주정부에 따라서 일반 교육 학교의 특별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잠재력 분석을 시행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직업적 목표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하며, 자체 미 외부 평가를 통해 타인 평가에 대한 비교까지 경험하게 된다. 성과와 별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잠재력 분석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잠재력 분석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지 분야를 선정하는 데 활용된다. 잠재력 분석 이후 직업탐색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특정 직업훈련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 잠재력 분석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기회를 통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능력을 파악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직업-과도기의 능력 개발방안을 위한 기준”에 근거하여 BMBF 평가 기준을 선정하며, 잠재력 분석은 직업탐색 프로그램(BOP) 내에서 교육체인 이니셔티브, 취업동행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EFS연방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은²⁵⁾ 8학년에서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적인 직업탐색은 일반적으로 일반 교육 학교의 8학년부터 시작되고 청소년들의 취업을 준비한다. 청소년들은 조기에 개인적 관심과 직업 선호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의 직업계획에 적용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직업 및 노동 시장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며, 이 경험들은 의식을 갖고 직업훈련을 결정하기

25) <https://www.bildungsketten.de/de/1572.php>(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9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직업탐색을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연방노동청, 연방 교육부 및 연구(BMBF) 그리고 주, 지역 단체, 학교 그리고 가정이 다 포함된다.

연방노동청은 보다 심층적인 직업탐색 방안을 제공한다(사회법 제 48조항). 청소년들은 심화된 직업 및 노동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직업 세계로의 계획 게임”(Plan spiele zur Berufswelt), “직업탐색을 위한 캠프”(Camps zur Berufsorientierung), 그리고 체험 코스 “투어에 오세요”(der Erlebnisparcours „Komm auf Tour) 등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 www.planet-beruf.de는 직업선택, 지원서 작성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진로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포털 www.berufe.tv에서는 노인복지사, 자동차 정비사, 또는 치과 기공사 같은 거의 모든 공인 전문직업과 관련하여 실습자들이 일상업무를 보고한다. 학교와 노동기관의 직업상담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탐색 교사는 학생들과 지역의 회사를 방문하고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직업훈련장소를 찾는다.

청소년들은 잠재력 분석에서 수집한 지식을 직업탐색과 연계한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잠재력과 강점을 능력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직업 및 미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직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자신감과 확신을 얻으며, 동시에 학업성적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갖게 된다. 직업탐색은 독일 전역의 모든 학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각각의 지역 고용기관 고용기관이 논의한다.

연방 교육 및 연구부(BMBF)는 2008년 범기업적이고 비교 가능한 직업교육 기관의 직업탐색 지원 프로그램 “Förderung der Berufsorientierung in überbetrieblichen und vergleichbaren Berufsbildungsstätten”을 시작했다. 기초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0년 이 프로그램은 재조정되었다.

2017년 초까지 약 4억 8000만 유로의 보조금이 투입되었고, 이로써 2008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12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독일 전역의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기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으며, 잠재력 분석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8학년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2주간 적어도 3개 분야의 직업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은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취업을 돕고 자신의 능력으로 목적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취업지원(BerEb)은 Hauptschule²⁶⁾ 또는 Förderschule를 졸업하려는 학생 그리고 직업교육에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며, 적절한 실습장소를 찾아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동행자는 우선 직업 교육 과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실습장소 소개, 직업탐색, 직업 교육 장소 지원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지원은 마지막 졸업년도, 다시 말해 학교를 떠나기 일 년 전에 시작하고, 첫 실습년도까지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지속된다(직업준비년도).

취업지원은 2009년 사회법에 근거하여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BMBF는 2010년 특별 프로그램 취업지원 교육제인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었으며 약 1,000개의 학교와 1,000명의 취업동행자가 있다. 2012년부터 취업동행은 기본방안으로서 모든 일반 학교에 적용되었다. 이로써 특별한 지원 욕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중점 지원방안이 마련되었고, 목표 그룹은

26) 독일의 초등과정은 초등학교(Grundschule, 1-4학년 해당, 연령 : 6-10)에서 이루어지며, 초등과정 4년을 마치고 나면, 다양한 형태의 중등과정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기본학교(Hauptschule, 5-9학년 해당, 연령 : 10-15)에서는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여, 기초단계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기본학교에 비해 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업학교(Realschule, 5-10학년, 연령 : 10-16)는 졸업 후 중급 단계의 자격을 갖추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학교 모두 실습기간을 위한 준비과정의 학교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된다. 김나지움Gymnasium(5-12(3)학년, 연령 : 10-19)은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 학교의 마지막 과정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Abitur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대학입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Kristen & Granato, 2007).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제한된다. 연방은 취업지원을 위해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억 유로를 편성하였으며, 그중 5억 유로는 연방 노동 및 사회부의 유럽사회기금(ESF)과 연방노동청의 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재정은 2018년 19학년 까지 확충되었으며, 약 3,000개 학교에서 중등학교 1학년 115,000명 학생에게 지원된다. 참여 학생 선발은 주의 문화부에서 결정한다.

취업 지원의 과업은 다양하며, 주로 인성개발, 졸업, 직업탐색 및 실습 참여, 면접 대비, 첫 직업교육 잘 해내기와 같은 과업으로 청소년을 지원한다. 취업동행자는 청소년과 함께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며,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잠재력 분석 결과를 통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청소년 각각의 직업선택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방과 후 수업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취업동행자가 직업훈련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시니어 전문가 서비스와 같은 자발적 교육동행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발적 동행자들은 교육을 마칠 때까지 청소년을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주 업무인 취업 지원 업무를 보완하고 직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기관은 연방교육기관의 의뢰를 받고, 취업동행자는 교육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업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요구받는다.

모든 학교의 약 40%가 취업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체인 이니셔티브에서는 효과적인 청소년 지원책으로 이러한 지원 방안을 이용하고 교장, 교사, 학교 복지사, 직업상담사, 사정 관리자, 위원회, 기업 등의 활동가와 협업한다. 취업지원의 대다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교 교사와 소통하며 이루어지고, 약 30% 이상은 연방노동청의 직업상담가와 협력한다. 이처럼 학교 교사뿐 아니라 직업상담가도 취업지원의 중요한 상담 및 협력 파트너이다.

직업선택패스²⁷⁾는 청소년들의 경험, 통찰, 문서를 수집하여 그들이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직업선택패스로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27) <https://www.bildungsketten.de/de/1570.php>(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0일)

분석하고, 직업선택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통찰을 문서화하고 반영한다. 교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실습을 평가하고 입사지원절차를 설계하거나 다음 교육 과정을 조직한다. 직업선택패스는 원칙적으로 7학년 학생에게 제공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직업선택패스 사용법을 알려 준다. 직업선택패스는 학교에서의 직업탐색활동 및 연방노동청과 연계되어 있다. 직업선택패스는 15년 이상 독일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직업탐색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이다. 거의 모든 주에서는 문서자료 및 반영자료를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려는 주정부의 전략으로 통합하였다.

학교²⁸⁾를 졸업하였으나, 직업교육을 찾지 못한 청소년에게 부합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가능한 바로 직업교육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들의 일부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제공되는 대안은 현실적이고, 목적에 맞아야 한다. 또한 자격 요건과 청소년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각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소년이 어려움 없이 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한다.

직업교육 진입하기(EQ)는 사회법(SGB) III §54에 따라 연방노동청이 후원하는 장기실습과정이다. EQ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자, 이주배경 등으로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에서 실시하고, 청소년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하며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목표는 청소년들을 직업교육조건하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청소년은 EQ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직업교육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실용적으로 설계되었다.

직업교육 동행(abH)은 사회법(SGB) III §75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방노동청으로

28) <https://www.bildungsketten.de/de/1569.php>(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9일)

부터 위임받은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용적이면서 전문적인 숙련, 지식을 청소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사회교육학적 지원 또한 받게 된다. abH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원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안정되기 때문에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 대상은 직업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앞서 설명한 EQ와 abH를 결합한 EQ Plus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독일에는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직업학교가 있다. 예로 직업준비 연도(BVJ)라고 하는 1년 또는 2년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선택된 직업군에서 한 번의 직업교육과정을 준비한다. 직업학교 차원의 서비스는 직업군을 특정하고 실무 비율이 높으며, 직장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문화부장관 회의는 학교 차원의 과정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원화된 직업교육 커리큘럼과 같은 교육과정을 직업교육의 내용과 목표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또한 이 과정은 가능한 직업훈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각 과정의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사회법(SGB) III §51에 근거한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방안(BvB)은 사회적 취약 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자들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9-11개월 정도 소요되며,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기본학교(Hauptschule) 과정을 늦게라도 이수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통해 본인들의 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보조교사들은 본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함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BvB는 직업탐색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적합하며, 내용과 범위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외부기관에서의 직업교육(BaE)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수료할 기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통합모델은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무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아 이를 실무단계에서 보충하는 것이고, 협동

모델은 실무를 직접 협력 기업에서 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두 가지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다. BaE는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사회법(SGB)III §130에 근거하여 보조 직업교육(ASA)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정식 직업교육을 수료하도록 지원한다. 회사 밖에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주고,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과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은 직업교육 과정 전후에 지원을 받게 되며,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데, 입사지원 트레이닝, 준비 과정 중의 실습 보조수업, 생활상담과 같은 서비스이다. 수업은 일반적으로 소그룹이나 1:1로 기업의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기업은 지원 및 직업교육관리, 상담, 특정 목표 그룹에 관한 정보 지원 같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ASA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보조 직업교육을 준비단계에 추가하여 지원 가능한 청소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연방노동청에 요청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 기업과 청소년은 무료로 받는다.

직장 상사 및 회사에서의 갈등, 학교 내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은 직업교육을 중도에 그만둔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업교육동행자 지원인 “베라”(VerA)를 제공한다. 베라는 직업교육 중단을 예방하고, 직업학교, 실습기업,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직업교육동행자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직업 및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소공업 및 수많은 기술적, 사업적, 사회적 직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매년 약 3,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동행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 평가 결과, 베라에 참여한 청소년의 80% 가량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동행자는 전문적인 응답, 실무를 위한 실습, 시험 준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직업교육동행자는 모든 청소년들을 인간적으로 지원하는데, 지원내용, 횟수와 시간과 같은 사항은 청소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서비스는 모든 직업교육과정에 적용되며, 베라코치는 직업교육의 조기 종료나 청소년이 새로운 기업을 찾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베라코치는 처음 취업 지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지원한다. 청소년들은 교육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자발적 직업교육동행자들은 모든 실습생을 인간적으로 돌본다. 중점내용, 만남의 횟수와 시간은 서로 결정한다. 이 서비스는 모든 직업과 직업교육에 적용된다. 교육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실습생, 교육기업 및 직업학교에 무료로 독일 전 지역에서 제공한다.

3) 이민자 특별지원-KAUSA

KAUSA²⁹⁾의 목표는 이주배경 자영업자를 유치하고, 젊은 이민자와 난민의 직업교육 참여를 증진시키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부모를 위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에는 이백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약 737,000명의 이주배경 자영업자가 있으며, 이들의 회사는 독일 국내총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독일 기업의 “다양성”에도 기여한다. 소매 및 외식업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서서 자영업을 하는 이민자들은 90여 개 이상의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중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이중 직업교육이 가능하지만, 정보 부족, 관료 시스템,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평균적으로 독일에 있는 회사의 경우 25%가 직업교육을 받지만, 이주배경 자영업자는 약 14%를 차지한다. KAUSA는 이주배경

29) <https://www.jobstarter.de/de/kausa-21.php>(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9일)

청소년의 직업교육참여를 지원하며, 독일 전역의 파트너와 함께 직업교육과 통합을 강화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이중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3년부터 KAUSA는 연방 교육 연구부의 의뢰로 지역 KAUSA 서비스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며,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이주배경 자영업자 및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민자 배경을 가진 자영업자 및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구조를 구축한다.

“직업교육-지금”은 KAUSA 서비스센터의 기조이다. 지역의 상담소는 이주배경 자영업자, 청소년 그리고 부모에게 이중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한다. KAUSA 서비스센터는 2016년 2월1일부터 젊은 난민들의 상담도 받고 있으며, 상담 외에도 기존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직업교육기관, 학교, 이민단체 및 회사와 함께 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원구조를 구축하며, 기존의 서비스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독일 전 지역에 31개 KAUSA 서비스 센터가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모를 위해 KAUSA는 “부모조언: 독일의 직업교육”을 발간 하였다. 부모들은 총 16개의 언어로 된 이 책자에서 독일의 이중 직업교육의 가능성과 직업선택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많은 교육기관, 직업센터, 학교에서 부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실행에 동참하며, 고용기구, 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총 41개의 프로젝트는 2013년 3월까지 대부분 이민자기업에서 9,000개 이상의 직업교육을 실행했다. 2013년 8월부터 JOBSTARTER 프로젝트는 독일의 다양한 도시에 KAUSA 서비스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직업교육 관련자들과 연계하여 이주배경 자영업자 및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구조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능력향상 방법을 통해 KAUSA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의 강점과 능력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지원받을 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업 교육-지금! 당신이 가진 강점을 보여 주세요.”는 연속 청소년 컨퍼런스가 진행된 KAUSA 청소년 포럼의 기조이다. 이 포럼은 2012년 베를린, 쾰른, 만하임,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들과 함께 조직하였다. 연방정부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결정한 “2010-2014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국가 협약”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것은 KAUSA 협약의 일부였다. KAUSA 청소년 포럼에서 청소년들은 미래의 전문가로서 지역 경제에 직면하여 본인을 소개하고,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 기업에 그들의 강점을 증명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또한 이중 직업 교육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기업은 대신에 청소년들의 희망과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의욕이 넘치는 미래의 전문가로서 알게 되었다. 2014년부터 KAUSA 청소년 포럼은 KAUSA 서비스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2) 일본

(1) 유입배경 및 현황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일본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양상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고교진학률이 약 70%에 그치는 점 등을 배경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 교육, 학교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2019년 문부과학성이 고교나 NPO가 기업이나 자원봉사자, 지역 내 유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고교생 등에 대해 고교중퇴 예방과 진로 보장의 관점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전망이다³⁰⁾.

30) 문부과학성은 재무성에 ‘외국인 고교생 등에 관한 진로, 취업 교육 등의 충실(外国人高校生等に対するキャリア教育等の充実)’ 신규 사업으로 연간 2억 엔(200百万円)을 2020년도 개산요구를 했다. 개산요구(概算要求)란 예산편성 시 각 성의 장관이 재무성 장관에게 내년의 세입 세출 예산, 예산의 이월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건적을 내고 요청하는 것이다.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nihongo_suishin/09/pdf/r1409907_02.pdf(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또 법무성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다문화공생종합상담원스톱 센터(多文化共生総合相談ワンストップセンター)’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주민이 만 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주민 비율이 2%(5천 명 이상) 이상인 지자체에서 유관기관 또는 NPO 위탁을 통하여 공모사업으로 동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동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11개 언어(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타갈로그어·베트남어·네팔어·타이어·인도네시아어)로 생활·행정정보, 법률·육아·교육·복지·노동·의료·출입국관리·가정 폭력 등에 대한 상설 상담과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³¹⁾.

(2)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가) 하마마쓰시의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

시즈오카현(静岡県) 하마마쓰시(浜松市)는 2016년부터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진로 지원의 관점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³²⁾. 공익재단법인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浜松国際交流協会)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참가 의식촉진, 직업의식 양성,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자치체국제화협회³³⁾의 조성금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유관 NPO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하마마쓰시에 있는 NPO ‘필리피노나가이사(FILIPINO NAGKAISA)’ 등은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는 진로

31) 외국인창구 교부금 천만엔 178개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서일본신문 보도 2019년 2월 14일
<https://www.nishinippon.co.jp/item/n/486663/>(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32) 공익재단법인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 2018년도 사업보고서
http://www.hi-hice.jp/doc/aboutus/H30_jigyohokokusho.pdf(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33) 일반재단 자치체국제화협회(一般財団自治体国際化協会, <http://www.clair.or.jp>)는 지역사회 다문화공생 거버넌스의 주요 조직으로 모든 광역 지자체 및 일부 대도시 기초지자체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자치체국제화협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NPO의 교량역할을 한다.

및 취업과 관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배경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주배경 고교생 취업 지원 응원 세미나’)를 벌이고 있다. 또 2016년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주배경 고교생 진로 지원자 연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생각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공립고교, 외국인학교, 취업한 청소년 등 지역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 총 135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 실행되었다. 조사 목적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활·진로 실태를 파악하여 진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마마쓰시 지역사회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정착한 데에 비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생활·학습·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희망, 가정배경, 진로 선택 시 필요사항 등이었다.

조사결과, 파견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계약직 맞벌이 부모를 둔 이주배경 청소년이 많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일하는 보호자를 둔 가정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취업 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대학 진학과 일본어 학습 지속을 원하는 청소년이 응답자 중 70%에 달했으나, “집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일하면서 대학에 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진로 선택 시 필요한 지원으로 장학금이나 대학 입학 정보 습득,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또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진로탐색이나 정보 지원,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배경 출신 선배 대학생과 사회인 조언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주배경 고교생 취업 지원 응원 세미나’ 사업은 고교에 이주배경 청소년 선배(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출신 사회인)가 지역 고교로 나가서 자신의 취업 경험을 나누고 세미나에 참가한 이주배경 고교생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미나는 이주배경 고교생의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이 자신의 롤모델이 될 이들(이주배경 청소년 선배)과 만나서 자긍심을 갖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고교에는 지역 내 기업의 협조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세미나가 열린다. 지역 내에 있는 회사(운송업, 건설업, 통신서비스업, 부품설계제조업 등 5개 회사)에 다니는 이주배경 청소년 선배가 이주배경 청소년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고교에 나가서 진로선택과 취업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기업에 대해 소개한 후 개별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주배경 청소년 선배가 자신의 성장사와 취업하게 된 계기, 진로 결정이나 취업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일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이야기하고, 참가한 이주배경 고교생들에게 장래 진로 목표에 따라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워크숍도 실시한다.



* 출처 : 하마마쓰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보고서

그림 IV-4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 이주배경 고교생 취업 지원 응원 세미나

2016년 하마마쓰시에서는 시즈오카현 내 고교 5곳, 외국인 학교 2곳, 헬로워크(공공직업안내소), 시즈오카현 다문화공생과, 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 하마마쓰국제과, 시즈오카현립대학 등이 참가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학교 교사와 유관기관 직원 등 이주배경 고교생의 진로 지원자 연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생각하는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나) NPO ‘필리피노나가이사(FILIPINO NAGKAISA)’의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

NPO ‘필리피노나가이사(FILIPINO NAGKAISA)’는 1994년 발족된 하마마쓰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일본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자 그룹으로 출발해 2012년도에 NPO법인으로 전환했다. ‘필리피노나가이사’는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가이드북을 만들었고(2014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 내 기업에서 단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정기적으로 일본의 노동법, 고용실태, 사회보험제도 등에 관한 강의, 취업 시 확정신고(연말정산)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필리피노나가이사’는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로부터 조성을 받아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가이드북>(타갈로그어, 일본어)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고교진학과 취업상담에 관한 정보, 진로를 결정한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선배들 4명과 보호자(이주배경 청소년의 어머니) 2명의 경험담 Q&A, 진로 선택 시 주의사항과 조언, 고교 진학 시 학비와 주의점 등을 실고 있다.

가이드북은 NPO필리피노나가이사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가 쉽고 상세하며 웹과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점 등이 특징이다. 필리핀과 일본의 학교제도(의무교육, 고등교육)의 차이 소개, 고등학교진학 시 학비(공립학교, 사립학교 입학비, 수업료 비교)·교과서비·교복비·급식비 안내, 외국인 학생 고교 특별선발전형 안내부터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소 소개, 헬로워크(공공직업안내소)의 외국인 고용 코너를 잘 이용하는 방법,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자격증 안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단기 취업 준비지원기관과 취업 훈련 실습과목 안내 등도 가이드북에 나와 있다.

가이드북 중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선배 4명과 보호자 2명의 경험담 Q&A 소개부분에는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해당 Q&A 인터뷰를 한 동영상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경험담 Q&A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헬로워크에 가서 취업에 이르거나 진학하는 과정, 이주배경 청소년 자녀의 교육과 진로 지도에 대한 부모의 대처 등이 나와 있다. 인터뷰 동영상의 모든 질문과 답은 타갈로그어, 일본어, 영어 순으로 진행되어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과 보호자의 접근성이 좋다³⁴⁾.



그림 IV-5 ‘필리피노나가이사’ 제작 배부 <진로가이드북>

하마마쓰시에 있는 일본패션기업 ‘아다스트리아(adastria)’의 브랜드 ‘글로벌 워크’ 매장과 연계해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매장에서接客서비스를 배우고 실습해 보는 서비스업 연수를 실시했다.

34) NPO필리피노나가이사의 홈페이지(<http://filipinonagkaisa.org/future-guide/>)에도 가이드북에 나온 이주배경 필리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선배들과 보호자의 체험담 인터뷰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다(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하마마쓰시에 거주하는 15~20살 필리핀 출신 청소년 6명이 ‘글로벌워크’ 매장에 가서 최근 일본의 패션업계의 동향과 ‘아다스트리아’사의 경영, 서비스업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손님 접객 시 유의점과 손님 직원 역할 바꾸기 연습 등으로 하루 단기 직업 체험을 했다. ‘아다스트리아’사는 사회책임경영(CSR)의 일환으로 이러한 단기 직업 체험을 제공했으며 동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소식을 홍보하고 있다.



* 출처 : 아다스트리아사 홈페이지³⁵⁾

그림 IV-6 필리핀 출신 청소년들의 단기 직업 체험

다) NPO법인 청소년자립원조센터

도쿄도 홋사시(福生市)에 위치한 NPO법인 청소년자립원조센터(青少年自立援助センター, <http://www.npo-ysc.jp/>)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니트³⁶⁾ 등을 지원하는 청년 지원 기관(1999년 설립)이다. 6~30살까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일본어 교육 전문 사업 ‘YSC글로벌스쿨’을 실시하고 있다.

‘YSC글로벌스쿨’에는 학교 등교 거부, 미취업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이 평일 11~17시까지 일본어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 ‘스텝

35) 아다스트리아사 홈페이지 CSR관련 소식 <https://www.adastria.co.jp/news/csr/2017121901/f>(최종 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36) 청년 계약직, 파견사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10~30대 청년들을 일컫는 말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다. 2017년부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형성을 목표로 한 일본어교육자 양성과정'이 개설됐다. 동 센터 내 정주외국인자제지원사업부에서 2010년도부터 이주배경 청소년, 청년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 내 '청년취업 지원관련사업부'와 연계하는 형태로 근처 대학 견학, 공공직업훈련소 소개와 안내 등을 실시한다.



* 출처 : 'YSC글로벌스쿨' 홈페이지³⁷⁾

그림 IV-7 NPO법인 청소년자립원조센터 'YSC글로벌스쿨'에 참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도쿄외국어대학교에 견학을 간 모습(도서관과 학생식당)

라) 사이타마현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이타마현(埼玉県)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³⁸⁾에서는 현내 각 지자체에서 공민관(평생교육시설)을 대관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청년(15~44살)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취업 지원 세미나는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참가비 무료로 실시된다. 세미나는 비자에 따른 취업형태 안내, 일본에서 장기간 일하기 위한 기술, 최신 구인 동향 및 일본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소개, 헬로워크 이용방법, 취업지원기관

37) <http://www.kodomo-nihongo.com/info/activity/20191112.html>(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38) 후생노동성의 위탁으로 15세~39세까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자립을 위한 종합상담을 하는 기관이다.

선택방법을 강의식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개최 시 참여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강의를 끝난 후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3.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의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국내 사례의 경우 이주민 집중거주 지역에 설립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원사업은 주로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어 지원이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관의 경우 상위법의 부재, 지원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현장 중심형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지원하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하고, 사업의 지속성 또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 기관 간의 협의체, 협력사업, 공동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평적인 상태에서의 기관과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 독일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은 “이주배경적” 요인을 먼저 고려하고, 보편과 특수에 기반이 된 지원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이주배경의 특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법(SGB)을 근간으로 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이 연방-연방노동청-주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주배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도 동시에 제공된다. 독일 전역에 450개 이상의 지역 소상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JMD³⁹⁾는 개인

39) JMD는 15-27세 이주배경 청소년을, MBE(Migrationsberatung für erwachsene Zuwandere)는 27세 이상의 이주배경 성인을 위한 지역 소상담 센터이다.

맞춤 상담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전문 상담사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까지 전문기관과 연계해 준다. JMD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초기 지원단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하마마쓰시에서는 시즈오카현 내 고교 5곳, 외국인 학교 2곳, 헬로워크(공공직업안내소), 시즈오카현 다문화공생과, 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 하마마쓰시 국제과, 시즈오카현립대학 등이 참가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참고해 볼 만하다. 그밖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연계되어 구축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먼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해 보이며, 보편과 특수의 관점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계사업이 주로 진로와 직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있어 수요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 인프라를 조사하여,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연계사업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 현재 이주배경 청소년 연계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기관 연계에 관한 실태와 요구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 프로그램(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 174명이다. 조사대상을 각 지역 내에서 실제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기관의 연계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 적합성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74명 중 남성이 23명(13.2%)이고, 여성이 151명(86.8%)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0명(28.7%)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등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40) 5장은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집필함.

표 V-1 조사대상자 분포

		계	
		사례수	%
전체		174	100.0%
성별	남성	23	13.2%
	여성	151	86.8%
지역	서울	16	9.2%
	인천 / 경기	34	19.5%
	대전/충청/세종	26	14.9%
	광주 / 전라	31	17.8%
	대구 / 경북	22	12.6%
	부산/울산/경남	28	16.1%
	강원 / 제주	17	9.8%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1)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2)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현황에 대한 인식 3)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요구도 4) 지역기관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설문조사 영역별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①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2)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현황에 대한 인식	①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정도에 대한 인식
	② 지역 내 서비스 연계 기관에 대한 인식
	③ 지역 내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

구분	세부 내용
3)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요구도	① 지역 내 서비스 연계 기관에 대한 요구도
	② 지역 내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
	③ 지역기관 연계의 저해요인
	④ 지역기관 연계의 필요요인
4) 지역기관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	① 사업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② 급식비
	③ 사업주관기관 운영
	④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운영
	⑤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
	⑥ 지역기관 연계 방식
	⑦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
	⑧ 컨설팅단의 역할

먼저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지역기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서비스 영역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지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어서 담당 지역에서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과정에서 저해요인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기관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종합지원모델(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연구진 전체 회의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어서 전문가 자문진(TF)에서 설문문항을 검토하였고, 자문진의 의견을 반영

하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승인번호: 201911-HR-수시-004-04),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V-1 설문문항 개발 절차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 목록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웹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 12월 9일까지 조사가 완료된 174명을 최종 표본으로 삼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에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사례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는 발송 직후 즉각 폐기하였다.



설문계속

그림 V-2 설문조사(웹조사) 화면

2. 조사결과

1)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1)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정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2.0%(매우 필요하다: 59.2% + 필요하다: 32.8%)로 나타난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8.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의 응답으로 현장에서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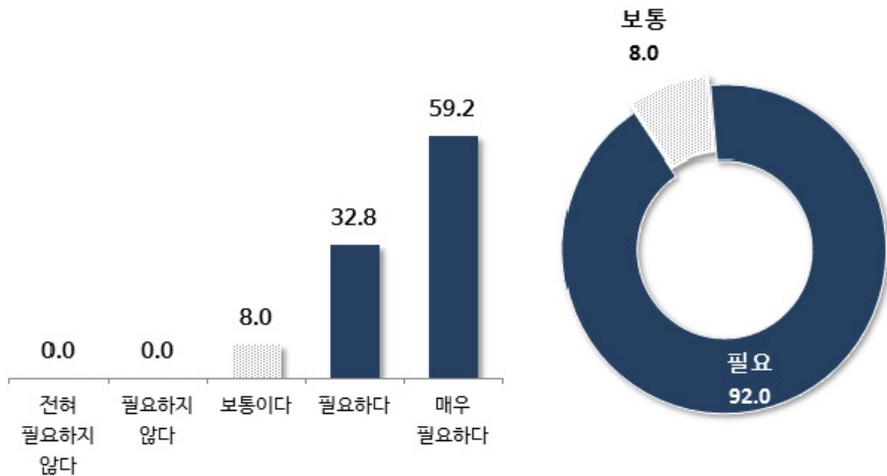


그림 V-3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정도

지역별 비교에서는 각 시·도별 사례수가 많지 않아 권역별로 묶어서 비교하였다. 담당 지역 내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천/경기에서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 중 32.1%가 인천/경기에 집중되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담당 지역 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3 지역별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 인식 정도

구 분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불필요*	*보통*	*필요*	
전 체	8.0	32.8	59.2	0.0	8.0	92.0	
지 역 별	서울	6.3	43.8	50.0	0.0	6.3	93.8
	인천/경기	2.9	29.4	67.6	0.0	2.9	97.1
	대전/충청	7.7	46.2	46.2	0.0	7.7	92.3
	광주/전라	6.5	25.8	67.7	0.0	6.5	93.5
	대구/경북	4.5	22.7	72.7	0.0	4.5	95.5
	부산/울산/경남	17.9	32.1	50.0	0.0	17.9	82.1
	강원/제주	11.8	35.3	52.9	0.0	11.8	88.2

2)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현황

(1) 지역기관 연계의 원활성 인식 정도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먼저, 담당 지역 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기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통’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그렇다’ 36.8%, ‘그렇지 않다’ 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응답은 36.8%(매우 그렇다: 5.7% + 그렇다: 31.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16.1%(전혀 그렇지 않다: 1.1% + 그렇지 않다: 14.9%)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0%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제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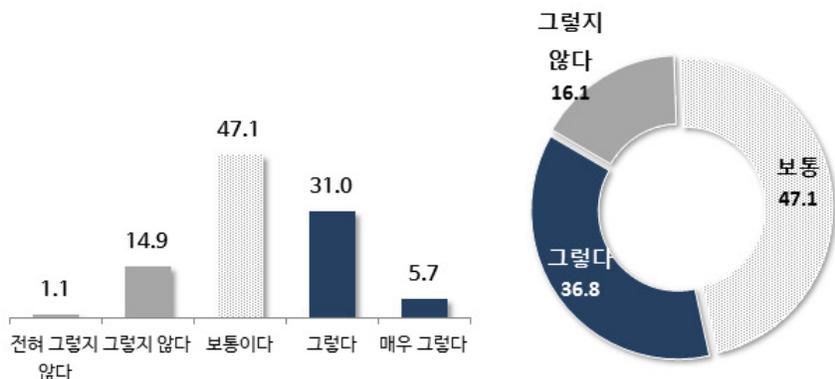


그림 V-4 지역기관과의 연계의 원활성 인식 정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담당 지역 내 지역기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대전/충청(46.2%)과 광주/전라(45.2%)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담당 지역에서 지역기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 지역(27.3%)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표본 수의 한계로 결과의 해석에 일부 한계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기관 연계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4 지역별 지역기관 연계 원활성 인식 정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1.1	14.9	47.1	31.0	5.7	16.1	47.1	36.8
담당 지역 별	서울	0.0	18.8	43.8	25.0	12.5	18.8	37.5
	인천/경기	0.0	17.6	41.2	32.4	8.8	17.6	41.2
	대전/충청	0.0	11.5	42.3	42.3	3.8	11.5	46.2
	광주/전라	0.0	12.9	41.9	38.7	6.5	12.9	45.2
	대구/경북	0.0	27.3	59.1	9.1	4.5	27.3	13.6
	부산/울산/경남	0.0	14.3	50.0	32.1	3.6	14.3	35.7
	강원/제주	11.8	0.0	58.8	29.4	0.0	11.8	29.4

(2)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담당 지역에서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한국어 교육’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습지원’ 62.6%, ‘심리·정서 지원’ 56.3%, ‘통번역지원’ 46.6%, ‘진로교육’ 44.3%, ‘한국문화교육’ 42.0%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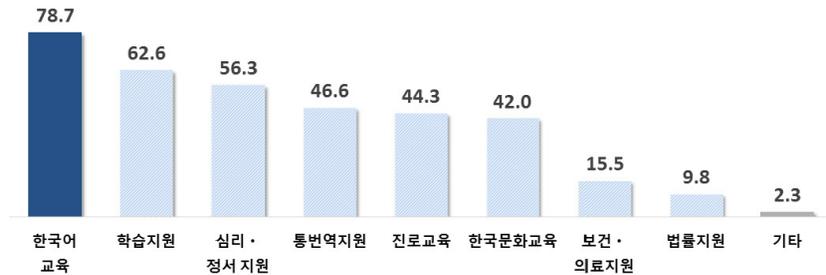


그림 V-5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중복응답)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의 경우 ‘인천/경기’ (82.4%) 및 ‘대전/충청’ (84.6%)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지원’의 경우 ‘강원/제주’ (82.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심리·정서 지원’은 ‘광주/전라’ (7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강원/제주’ (29.4%)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술한 결과는 지역 내에서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의 영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별로 서비스 공급의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대상을 토대로 조사하여 연구 결과 해석에 일부 한계를 지니는데, 추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표 V-5 지역별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중복응답)

구 분	한국어 교육	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통번역 지원	진로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보건·의료 지원	법률 지원	기타
전 체	78.7	62.6	56.3	46.6	44.3	42.0	15.5	9.8	2.3
담당 지역 별	서울	75.0	50.0	62.5	31.3	50.0	56.3	6.3	6.3
	인천/경기	82.4	64.7	61.8	41.2	50.0	38.2	32.4	11.8
	대전/충청	84.6	61.5	53.8	50.0	38.5	42.3	19.2	11.5
	광주/전라	77.4	64.5	74.2	58.1	41.9	45.2	16.1	9.7
	대구/경북	77.3	54.5	45.5	31.8	63.6	45.5	4.5	9.1
	부산/울산/경남	75.0	60.7	53.6	53.6	32.1	39.3	7.1	10.7
	강원/제주	76.5	82.4	29.4	52.9	35.3	29.4	11.8	5.9

(3)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 기관

담당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장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교육청’ 35.6%, ‘다문화교육지원센터’ 35.6%,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35.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6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중복응답)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이 74.2%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의 경우 '강원/제주'에서 5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학습지원'이 '강원/제주'에서 가장 높았던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32.3%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제주'에서 1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연계 서비스 분석 결과인 '심리·정서'의 응답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어떠한 기관과의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관련 연계 서비스의 영역도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V-6 지역별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중복응답)

구 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교육청 (교육 지원청)	다문화 교육지원 센터	초·중· 고등학교 (대안학교 포함)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민간지원 기관	청소년기관 (수련관, 문화수업 등)	지역 복지관	출입국 외국인청	보건· 의료기관	기타	
전 체	66.1	35.6	35.6	35.1	23.6	15.5	14.9	10.9	6.3	4.0	2.3	
담당 지역 별	서울	62.5	18.8	31.3	25.0	25.0	18.8	25.0	31.3	0.0	0.0	0.0
	인천/경기	70.6	29.4	32.4	55.9	23.5	20.6	11.8	0.0	14.7	5.9	2.9
	대전/충청	65.4	26.9	38.5	38.5	26.9	11.5	23.1	19.2	7.7	3.8	0.0
	광주/전라	74.2	38.7	51.6	41.9	32.3	9.7	16.1	6.5	9.7	3.2	0.0
	대구/경북	68.2	50.0	31.8	18.2	22.7	18.2	9.1	9.1	0.0	0.0	4.5
	부산/울산/경남	53.6	35.7	35.7	25.0	17.9	10.7	7.1	10.7	3.6	3.6	3.6
	강원/제주	64.7	52.9	17.6	23.5	11.8	23.5	17.6	11.8	0.0	11.8	5.9

3)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요구도

(1)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지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먼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장 전문가들이 담당 지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는 '심리·정서 지원'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71.3%, '학습지원' 50.0%, '진로교육' 43.7%, '한국문화 교육' 3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순위 기준으로는 '한국어 교육' 54.6%, '심리·정서지원' 27.0%, '진로교육' 6.3%, '학습지원' 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의 추가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조사하였는데, 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에게 한국어습득은 한국생활적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심리·정서 지원'은 관련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많았다.

[1순위+2순위+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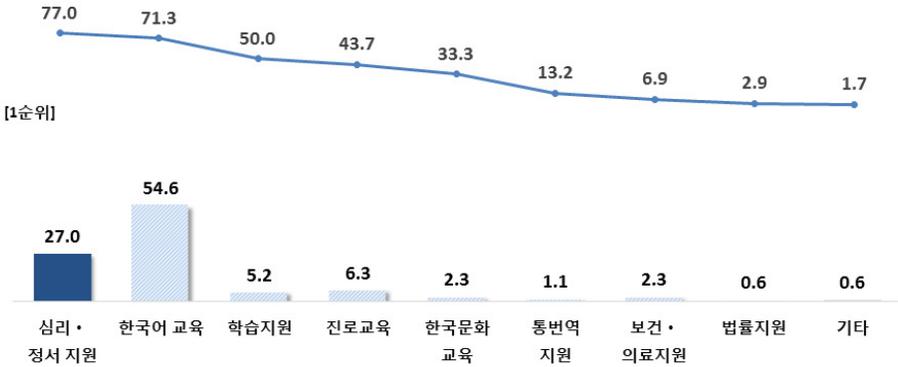


그림 V-7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심리·정서지원' 및 '한국어 교육'의 경우 '서울'에서 각각 8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습지원' 및 '진로교육'은 '강원/제주' 지역에서 각각 64.7%, 58.8%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추가적인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하여 지역에 따라 연계의 현황뿐 아니라 요구도를 파악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7 지역별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1+2+3순위)

구 분	심리·정서지원	한국어 교육	학습지원	진로교육	한국문화 교육	통번역 지원	보건·의료지원	법률지원	기타	
전 체	77.0	71.3	50.0	43.7	33.3	13.2	6.9	2.9	1.7	
담당 지역 별	서울	87.5	87.5	37.5	25.0	43.8	6.3	0.0	6.3	6.3
	인천/경기	79.4	76.5	41.2	50.0	32.4	8.8	8.8	0.0	2.9
	대전/충청	73.1	76.9	46.2	42.3	34.6	15.4	3.8	7.7	0.0
	광주/전라	74.2	58.1	58.1	45.2	35.5	12.9	12.9	3.2	0.0
	대구/경북	81.8	77.3	59.1	45.5	22.7	9.1	4.5	0.0	0.0
	부산/울산/경남	67.9	71.4	46.4	35.7	46.4	21.4	7.1	3.6	0.0
	강원/제주	82.4	52.9	64.7	58.8	11.8	17.6	5.9	0.0	5.9

(2)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

이어서 담당 지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순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응답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청(교육지원청)’ 5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3.9%, ‘청소년기관(수련관, 문화의 집 등)’ 27.0%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 기준으로도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25.3%, ‘교육청(교육지원청)’ 18.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1% 등의 순으로 앞선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위해 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순위+2순위+3순위]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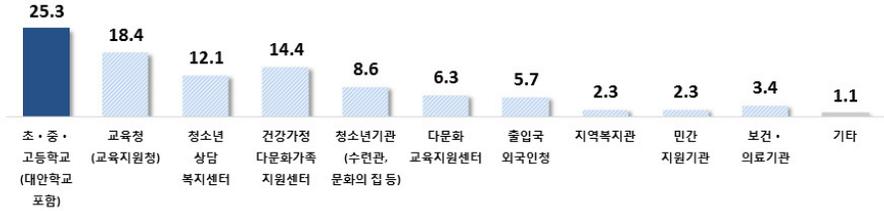


그림 V-8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는 ‘인천/경기’에서, ‘교육청’은 ‘광주/전라’ 및 ‘강원/제주’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V-8 지역별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기관(1+2+3순위)

구 분	초·중· 고등학교 (대안학교 포함)	교육청 (교육 지원청)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청소년 기관 (수련관, 문화의 집 등)	다문화 교육지원 센터	출입국 외국인청	지역 복지관	민간 지원기관	보건· 의료기관	기타	
전 체	60.3	52.3	48.9	33.9	27.0	23.6	17.8	12.6	11.5	10.3	1.7	
담당 지역 별	서울	56.3	50.0	50.0	18.8	37.5	0.0	37.5	6.3	25.0	12.5	6.3
	인천/경기	79.4	50.0	35.3	29.4	26.5	29.4	14.7	11.8	11.8	11.8	0.0
	대전/충청	53.8	42.3	61.5	38.5	19.2	34.6	15.4	19.2	3.8	11.5	0.0
	광주/전라	51.6	64.5	58.1	45.2	19.4	25.8	9.7	6.5	6.5	12.9	0.0
	대구/경북	63.6	54.5	45.5	31.8	22.7	27.3	22.7	4.5	13.6	9.1	4.5
	부산/울산/경남	57.1	42.9	53.6	21.4	39.3	21.4	25.0	25.0	7.1	3.6	3.6
	강원/제주	52.9	64.7	35.3	52.9	29.4	11.8	5.9	11.8	23.5	11.8	0.0

(3)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의 장애요인

다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의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1+2+3순위 기준으로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감대/합의 부족' 응답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자원의 부족' 60.9%, '추진인력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 58.6%, '기존 협의체(네트워크)의 조정기능 부족' 47.7%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 기준으로는 '지역자원의 부족' 24.7%, '추진인력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 20.7%,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감대/합의 부족' 2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지역자원이 부족한 경우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문제나 지역 내 공감대 및 합의가 없다면 관련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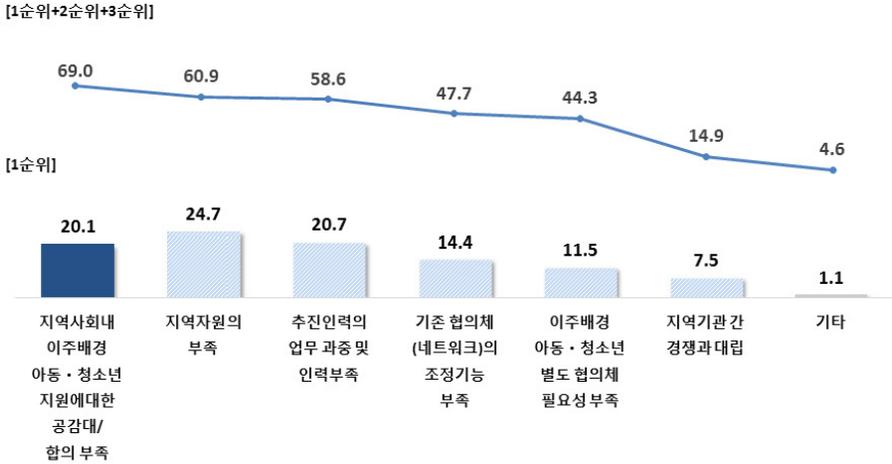


그림 V-9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감대/합의 부족’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의 부족’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진인력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에 대한 응답은 ‘강원/제주’ 지역에서 높은 특성을 나타냈으며, ‘기존 협의체(네트워크)의 조정기능 부족’은 ‘서울’ 및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마다 저해요인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9 지역별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구 분	지역사회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대한 공감대/합의 부족	지역자원의 부족	추진인력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	기존 협의체 (네트워크)의 조정기능 부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별도 협의체 필요성 부족	지역기관 간 경쟁과 대립	기타	
전 체	69.0	60.9	58.6	47.7	44.3	14.9	4.6	
담당 지역 별	서울	62.5	43.8	68.8	62.5	43.8	18.8	0.0
	인천/경기	67.6	64.7	50.0	58.8	41.2	11.8	5.9
	대전/충청	73.1	57.7	61.5	50.0	34.6	23.1	0.0
	광주/전라	74.2	51.6	48.4	51.6	61.3	12.9	0.0
	대구/경북	63.6	72.7	59.1	40.9	31.8	13.6	18.2
	부산/울산/경남	75.0	67.9	53.6	42.9	42.9	14.3	3.6
	강원/제주	58.8	64.7	88.2	17.6	52.9	11.8	5.9

(4)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

한편,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해서는 1+2+3순위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응답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64.4%, '지역자원의 확충' 6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25.9%,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23.6%, '전문인력 추가 배치'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나, 1+2+3순위 기준의 결과와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추진인력의 업무 과중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과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방증한다.

[1순위+2순위+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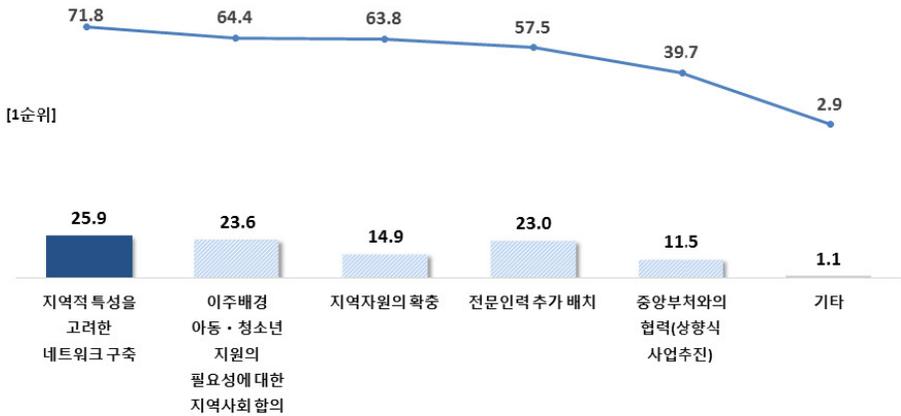


그림 V-10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인천/경기'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지역자원의 확충'은 '강원/제주'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처럼 지역 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0 지역별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구 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지역자원의 확충	전문인력 추가 배치	중앙부처와의 협력(상향식 사업추진)	기타	
전 체	71.8	64.4	63.8	57.5	39.7	2.9	
담당 지역 별	서울	75.0	75.0	56.3	56.3	37.5	0.0
	인천/경기	79.4	64.7	52.9	58.8	38.2	5.9
	대전/충청	65.4	80.8	65.4	53.8	34.6	0.0
	광주/전라	74.2	67.7	51.6	64.5	41.9	0.0
	대구/경북	68.2	63.6	72.7	50.0	36.4	9.1
	부산/울산/경남	71.4	53.6	71.4	53.6	46.4	3.6
	강원/제주	64.7	41.2	88.2	64.7	41.2	0.0

4) 지역기관 연계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지역기관 연계사업 모델에 대하여 전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종합지원모델(안)의 세부 내용별로 조사하였다.

(1) 사업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먼저 사업주관기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담당 지역 내에서 지역기관들의 연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관기관으로서 단위학교나 다른 여타 시설들보다 지역 내에서 일정 이상의 행정적인 권한, 인력·재정적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교육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학교 내 재학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까지 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고, 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지역 내 기관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일부 의견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전문기관,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및 관리사무소 등이 있었는데, 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선정에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술한 맥락에서 사업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징과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 및 협의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피하고, 기관별로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초기 지원, 한국어, 학습, 진로, 가족,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사업주관기관(센터) 운영

사업주관기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담 및 전문인력배치와 인건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행·재정적 지원 인력과 현장 지원 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지역의 특성과 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유형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여러 현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관기관(센터) 운영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3)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가칭)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가칭) 운영과 관련한 의견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를 통한 사업 통합과 유관기관 연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가령, 한국어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찾아가는 한국어학급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방문교육사업 등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지역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지원, 심리·정서지원, 진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의 투입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의 함께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원 인력의 배치와 파견 강사 자격의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

다음으로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민관학협의체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먼저 민관학협의체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위원장은 지자체 위원장 혹은 지역사회 기관장, 또는 선출을 통해 민관 공동으로 맡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으나, 공통적으로는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 가족, 다문화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팀장급 이상의 현장전문가들이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업무협약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대한 자원 발굴, 공동사업, 교육 및 포럼 등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5)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원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역 내 사업주관 및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협력기관과 연계 및 공동집행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많았다. 그 외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과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전일제 수업이나 방과후 운영기관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6)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

다음으로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정부합동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 및 관리 기능을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앙지원단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매뉴얼 및 지침 제공,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업정책의 수립,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사업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지원협의체와

중앙지원단에서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7) 컨설팅단의 역할

컨설팅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컨설팅단의 주체와 구성 및 컨설팅 내용과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컨설팅단의 주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나 담당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컨설팅단의 구성은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민관협력 전문 컨설팅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구체적인 컨설팅단의 역할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안 및 컨설팅이 필요하고 사업의 방향과 운영 방안,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정기적으로 관리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교육과 자문, 그 외에 우수사례 제시 및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8) 기타 의견

그 밖에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지역기관 연계에 대한 기관장과 실무자, 교육청이나 지자체, 학교 등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지역 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없다면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다문화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청소년정책의 큰 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수행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소결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현장 담당자 174명을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장 담당자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제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기관의 연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추후 이러한 지역별 지역기관 연계 정도 격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지역에서 연계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통번역지원’, ‘진로교육’ 등의 순이었고,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응답을 제외하면,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었으나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로도 연계서비스와 기관에 차이가 있었는데, 어떠한 기관과의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연계 서비스의 영역도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해서는 1-3순위의 합을 기준으로 ‘심리·정서 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정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현장에서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연계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순위의 합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교육청(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순이었는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 교육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상담복지센터 등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의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하여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감대/합의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자원의 부족’, ‘추진인력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기존 협의체(네트워크)의 조정기능 부족’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지역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와 ‘지역자원의 확충’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역별로 연계 실태에 차이가 있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환경과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과 필요로 하는 요인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보다는 지역단위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고유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구체적인 지역기관 연계사업 모델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저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인력배치와 인건비 예산 확보가 해당 사업주관기관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통합 및 유관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가칭)’ 운영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민관학협의체와 관련하여 현장 전문가들은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되,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 및 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협의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대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의 사업 및 교육, 포럼 개최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이러한 지역 내의 연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동지원 협의체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만 구성과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합동협의체의 경우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업무 공유와 함께 유연한 협조가 필요하며, 중앙지원단에는 학계, 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기관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매뉴얼 및 지침 제공, 연구 및 사업정책의 수립,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사업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이 중앙차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 진행과정에서 컨설팅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 필요하며, 사업의 방향과 운영 방안,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 우수사례 제시와 공유 등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성공적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지역기관 연계에 대한 기관장 및 실무자, 교육청이나 지자체, 학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큰 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VI.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1. 모델 개발의 근거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
모델 모형 및 운영 방안

1. 모델 개발의 근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현황 분석, 국내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연계 사례 분석, 전문가 대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전술한 연구결과는 모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모델 반영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VI-1>과 같다.

표 VI-1 연구결과의 모델 반영 사항

구분	연구결과	모델 반영 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지역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와 세부 유형에 차이가 큼.	→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 운영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 수의 급증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집단 내에 이질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정책과 사업은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상자 발굴과 지역 내 지원사업을 조정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41) 6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집필함.

구분	연구결과	모델 반영 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정책 분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부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학습지원, 학교적응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교육, 다문화 수용성, 이중 언어교육, 학부모 지원, 지역사회 연계에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영역 존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연계 현황 조사 반영
	주요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의 기능들이 유사하고, 정책 수혜 대상도 다수 중복 부처 간 상이한 전달체계로 인해 지역 단위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이 분산되어 진행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및 사각지 대의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조정과 협력 기능 반영
	단위학교 차원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 수행의 한계점, 민관학 지역협의체 운영의 적은 예산과 기능의 한계점 존재	→ 지자체 단위에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관계 발전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조직 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 반영 및 공공기관 및 민간 조직 및 단체 등을 포함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대개로 참여 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컨센서스 추구	→ 기관장 중심의 협의체 또는 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실무자 중심의 그룹 운영을 통한 실질적 참여 보장
	지역 단위의 공동의 문제 존재, 해결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인프라 존재 여부가 중요	→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려, 지역 내 부족한 가용 자원에 대한 보강 반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지역사회 협의체 또는 위원회) 필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유인(예: 성과에 대한 보상 등) 고려	→ 민관학협의체 운영을 위한 조례나 지침 권장, 컨설팅 지원 과정에서 우수사례 공유 반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은 상위법의 부재, 지원체계의 미확립에 따라 현장 대응 중심. 장기적인 계획수립이나 지속성의 한계	→ 기관들 간의 협의체, 협력사업, 공동 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반영

구분	연구결과	모델 반영 사항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지원사업 사례 분석	독일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은 보편과 특수에 기반이 된 지원체계로서 사회법(SGB)을 근간으로 한 교육 및 직업 교육이 연방-연방노동청-주정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JMD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청소년 지원정책의 보편성 하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반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지역별로 연계 현황에 차이가 있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환경과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계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과 필요로 하는 요인 역시 차이가 발생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반영, 지역단위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고유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델 반영
	구체적인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관기능 선정 필요	→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주관기능 선정에 자율성 부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인력배치와 인건비 예산 확보 필요	→ 사업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반영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통합 및 유관기관의 연계가 필요	→ 지역사회 민관학협체체의 운영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자원 간 또는 네트워크 간 연계 강화 모델 설계
	민관학협체에서 관의 협력이 중요,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의 적극적 참여 필요, 단순한 협의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네트워크 운영 필요	→ ‘지역사회 민관학협체’의 운영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전제,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 고려, 자원 발굴부터 정보 및 자료교환, 인력 교류, 물적 자원 공유, 재정지원, 공동 사업 수행,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 강화 반영
지역 내의 연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동지원협의회 및 중앙지원단의 역할이 중요	→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 간 정부합동지원협의회 운영 모델 반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운영 등의 중앙지원단 역할 모델 반영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모형 및 운영 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누구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추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추진 모델은 결국 지역사회별로 다른 성장지원 환경에 맞게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맞게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모델이 될 것이다. 하향식(Top-down) 정책추진이 아닌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 모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자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네트워크가 강하거나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새롭게 연결해 줄 수도 있다.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라면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자원의 규모가 다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준도 다르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가 정책추진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활성화하는 주체 또는 기관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로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신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고 활용한 이후에 신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떤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지역의 수요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어 지원이든 학습지원 또는 심리·정서 지원이든 지역 내 자원 연계로 충족되지 않는 자원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신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떤 서비스 유형이든 어떤 인력의 배치든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어야 이른바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진로교육 서비스가 가장 부족하면 진로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가 가장 취약하면 심리·상담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주관기관의 사업담당 인력의 소진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 추가적인 인력의 배치와 더불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원칙 하에 2020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사업추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사업주관기관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하고 있거나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본 사업의 핵심인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맡아야 한다. 사업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 하더라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주관기관이 해야 할 과업은 '급식비 지원', '센터의 운영',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운영'으로 구성된다. 예산구조는 단순하지만, 지역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운영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자원 간 또는 네트워크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를 통해서도 확보되지 않는 서비스는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전문강사 또는 전문인력 파견지원 중심)로 보강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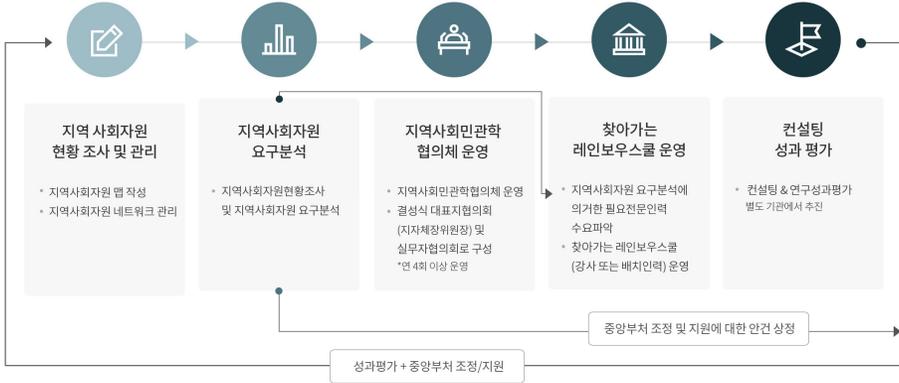


그림 VI-1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모델

(1) 급식비 지원

사업주관기관의 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사업주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할지 지역 내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집행할지 여부 등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급식 단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급식비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센터의 운영

사업주관기관(센터)에는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의 행정사항(급식비 지원,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신규인력의 배치나 사업 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팀장급 이상의 인력 수급을 위한 인건비나 수당 지급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신규인력과 코디네이터 운영을 어떤 구성으로 배치할지 (신규인력 2명+코디네이터 또는 신규인력 1명+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지역과 센터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요건을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운영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가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과 달리 센터가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전문인력 지원서비스이다.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먼저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첫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둘째, 학습지원 영역, 셋째, 심리·정서 지원의 영역, 넷째, 진로교육의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률지원, 건강지원, 통번역서비스 등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입국 초기부터 취업하여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국초기 법률지원, 건강지원, 통번역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각 영역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용한 지역사회 내 자원 현황을 파악한 후 협의체 운영과 자원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간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보강해야 할 서비스를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지역에서 심리·정서 지원이 가장 취약하다면 상담사 인력을, 진로교육이 취약하다면 진로교육 전문가를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해서 충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교육 등 어느 영역의 서비스를 보강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지역자원 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중언어 강사나 매우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놀이치료사나 통번역사,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가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복수의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가장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지역맞춤형 서비스 방식이어야 한다.

서비스 영역	자원현황(맵)	01	신규투입 필요 자원은 무엇인가? (찾아가는 레인보우 스톰)
		02	
한국인 및 한국문화 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국어학교 등	01	
		02	
학습지원	대인교과수업 현장체험학습 등	01	
		02	
심리정서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center 정신보건센터 등	01	
		02	
진로교육	대한상공회의소 잔로직업체험센터 등	01	
		02	
기타 (법률/건강/통역번역지원)	통역번역사/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	01	
		02	

그림 VI-2 서비스 영역 및 지역사회 자원 현황 분석

(4)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의 운영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의 운영은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에 이미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기존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모델 1).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모델 2). 협의체는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에, 형식적인 MOU 체결이나 몇 차례 회의 개최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협의체 운영의 핵심은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있다.

자원의 수를 늘리고, 연계의 밀도를 높이는 것(자원 간의 연계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협의체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네트워크의 밀도(자원 간 연계의 정도)를 높이는 일은 정보 및 자료교환, 인력교류, 물적자원 공유, 재정지원, 공동사업 수행,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가능하다.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교류의 횟수가 늘거나 교류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고 참여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서비스의 강화)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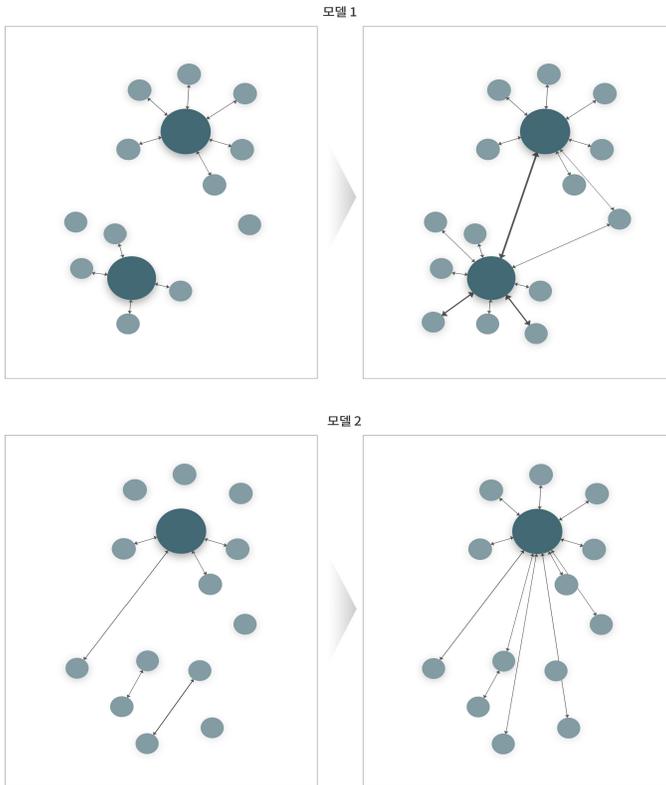


그림 VI-3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네트워크) 운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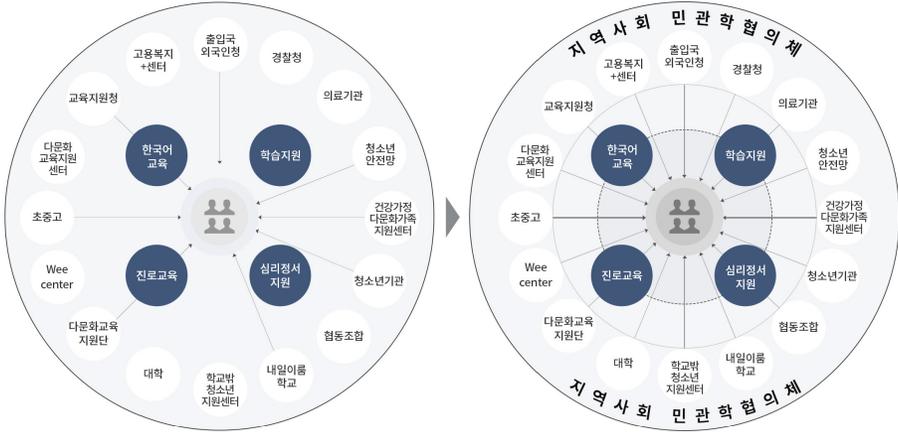


그림 VI-4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강화

사업 초기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주관기관과 지자체는 지역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자원 맵의 작성). 잘 연계되어 있는 자원과 그렇지 못한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자원의 수를 늘리고,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협의체의 첫 번째 기능이다.

협의체의 두 번째 기능은 지역 내에서 자원 연계가 제한적이거나 지역(지자체 또는 교육청)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이다.

2) 정부합동지원협의체 및 중앙지원단 그리고 컨설팅단의 역할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사업진행 과정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부합동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시범사업 지역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합동지원협의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민관학협의체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부처 간 협업이나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정책의 조정, 정책사업의 개발 등)를 취한다.

중앙지원단은 중앙부처 담당자를 포함하여 중앙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협업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중앙지원단은 또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하는 것도 컨설팅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컨설팅은 협의체 회의나 지역사회 기관 간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단은 일종의 중앙지원단의 성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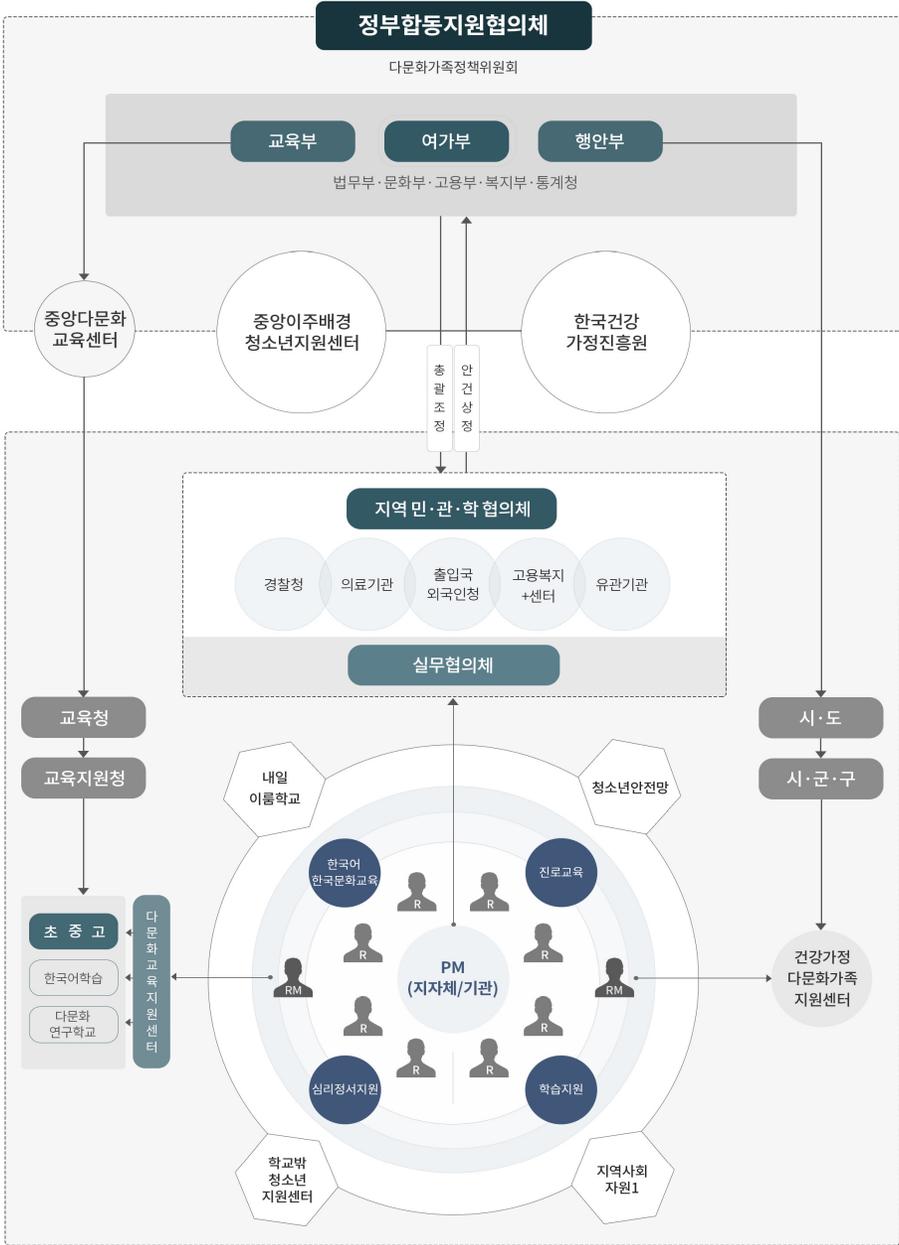


그림 VI-5 사업추진 모델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운영 예시(안)

(1)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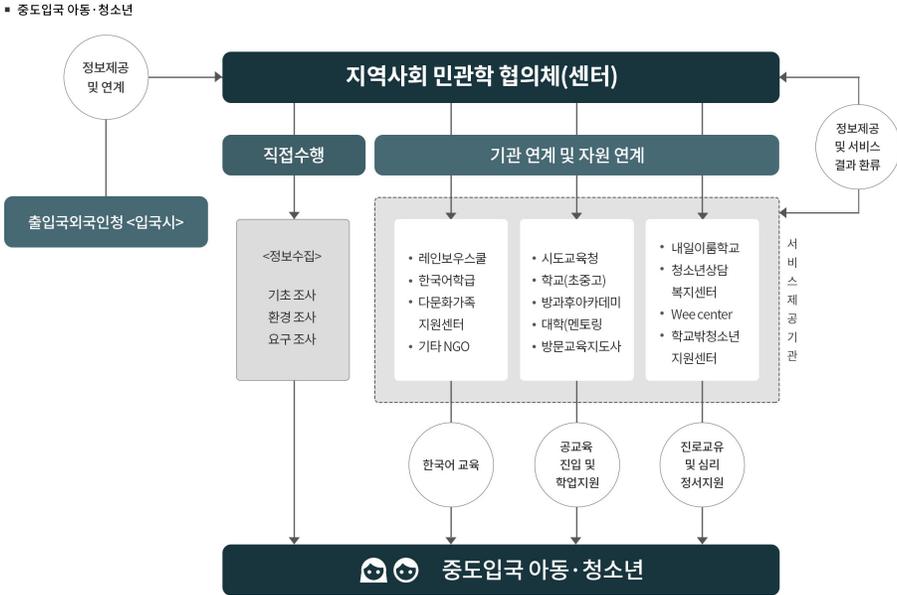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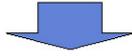
그림 VI-6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서비스 연계 예시(안)

사례 ① 중국에서 중도입국한 14세 청소년.

- 배경 : 어머니는 자녀가 7세 무렵에 한국으로 결혼 이주하였고, 14세까지 홀로 헤어져 지내다 한국으로 입국함.
- 언어 :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함.
- 학업 :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 있으나 급히 입국하는 바람에 학력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함. 자녀와 부모는 한국의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심리정서 : 어머니와 헤어져 지금까지 홀로 지낸 탓에 불안감, 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를 호소함. 재혼가정으로서 새아버지와 새로운 가족(형제자매)과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의 서비스 지원

- 한국어 교육을 위해 부모가 직접 교육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고 아이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 한국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직접 방문하고 있음. 그러나 학력증명 서류의 미비로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어와 학업 지원에 비해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일부는 새로운 가족과의 갈등, 엄마와의 불화 등으로 다시 중국으로 귀환하거나 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앞으로의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입국 시,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연계 의뢰
- 센터(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는 아동·청소년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도출함.
- 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기관 연계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제공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체류기간과 상황에 맞는 한국어교육 제공 : (학교 내)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 학급, (학교 밖) 레인보우스쿨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 공교육 진입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인 연계하여 학력심의회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 입·편입학 지원
 - 심리·정서지원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Wee center 등과 연계하고 처치 또는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민관학 협의체에 소속된 전문기관으로 연계 등 후속조치 지원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센터(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에게 공유하고 센터(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함.

(2)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아동·청소년

■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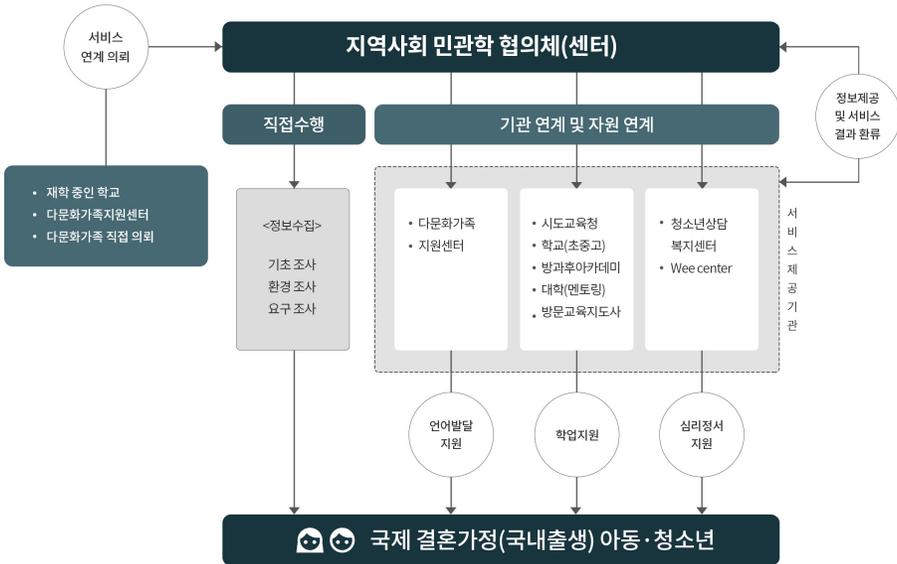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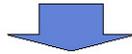
그림 VI-7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아동·청소년 서비스 연계 예시(안)

사례 ②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의 8세 아동

- 배경 :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임.
- 언어 : 일상적인 대화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비해 읽기와 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업 :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업 수준이 비(非)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비해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심리·정서 : 입학 초기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피부색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음. 이후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불안감이 높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의 서비스 지원

- 읽기, 쓰기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발달의 문제를 넘어, 학업발달 지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누적될 경우 학습부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초기에 읽기, 쓰기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나 개인적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학교 내에 한국어학급이 있으나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아동·청소년 대상자가 아님).
- 학업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으로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의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아동·청소년 재학 학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의 요청으로 서비스 연계 의뢰
- 센터(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는 아동·청소년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도출함.
- 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기관 연계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제공함.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서비스를 통해 언어발달상황(일상대화에는 문제가 없으나 읽고 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
 - 학업지원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제공하고 그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심리·정서 지원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Wee center 등과 연계하고 처치 또는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민관학 협의체에 소속된 전문기관으로 연계 등 후속조치 지원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센터(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에게 공유하고 센터(지역사회 민관학 협의체)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함.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로드맵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자원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의 도입과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한 개선, 지역기관 연계 사업의 확대, 마지막으로 정책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토대로 2020년에 2개소의 이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진행이 포함된다. 종합지원모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협의체 및 중앙지원단도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의 진행에 따른 모니터링과 평가도 여기에 해당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이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확산 모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확대 단계는 앞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고려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사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3유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청소년 지원체계와의 연계방안으로서 청소년 기관 중심의 운영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기관 연계 사업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도 포함된다.

마지막 정책화 단계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정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관련 계획이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사업을 확산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VI-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로드맵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창현 (2006).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조정,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18(2), 561-584.
- 경기도의회(2015).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혁신교육지구 정책이슈와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 교육부 (2012.03.13).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웹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30328&lev=0&searchType=S&statusYN=C&page=4&s=moe&m=020402&opType=N> 에서 2019년 10월 17일 인출.
- 교육부a (2019.03.05.).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보도자료. 교육부 웹페이지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9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 교육부b (2019.08.2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웹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10월 28일 인출.
-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교육부 웹페이지 http://www.career.go.kr/cnet/epub/selection/book/solution_s2.pdf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구교준, 김성배, 기정훈 (201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3), 23-46.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미숙, 배화옥, 정익중, 조성호, 박명숙, 김지민 (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무 (2010).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정책이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상연구**, 24(3), 65-89.
- 김석준, 강인호, 김정렬, 강제상, 문병기, 이종열 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이선, 민무숙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식, 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현철 (2016).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방안. **2016년 다문화가족 포럼 연계 학술대회 자료집: 다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 김홍주, 박길태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사회과학연구**, 49(1), 93-128.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1), 99-129.
- 배은주 (2006). 차별과 동화: 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교육비평**, 22, 214-234.
- 보건복지가족부, 덕성여대산학협력단 (2009).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 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송미령, 조미형, 심재현, 유은영, 김나리 (2016).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0).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03.06.).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03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8.03.0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71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9.07.09.).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61hsid+qLf9FnutmgMVIqLcE.mogef10?mid=plc502&bbtSn=202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V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 김현철, 김성식, 김재우, 박새봄 (2013). **다문화교육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온드림센터 (2018). **온드림교육센터 활동보고서**.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웹사이트 http://ondreamedu.com/bbs/board.php?bo_table=35&wr_id=35&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에서 11월 27일 인출.

- 이수인, 이순미, 최지훈 (2019).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전북: 전북연구원.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윤주, 오해섭, 김언주, 강지원, 백승주, 성지은 외 (2018).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태수, 강창현, 김신렬, 류만희, 민현정, 정홍원 외 (2007).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모형개발**. 행정자치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장명림, 김은영, 이정림, 박수연 (2009).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장임숙 (2013).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한국행정논집**, 25(3), 693-716.
- 정수정, 류방란 (2012).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비교교육연구**, 22(2), 47-77.
- 정수정, 최순종 (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균, 장영신 (2013).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 비교 :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211-228.
- 최균, 정경배, 장진용 (2011).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최무현, 김경희 (2015).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공공사회연구**, 5(3), 229-281.

- 최영미 (2015). 독일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이주민 부모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8(1), 171-19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4.12). '법무부, 관계부처와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 논의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 보도자료.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jsessionid=K8XaTpIEOSVpcfmeych84FsfyPwJOiU_mEJu_s9t.wizard-5-gzwks?enc=Zm5jdDF8QE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0OTA2NTMlMkZhcjRjZjZpZXcuZG8lM0Y%3D에서 2019년 12월 17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한국교육개발원.
- 한금섭 (2003).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의 문제. *월간복지동향*, 53, 17-19.
- 행정안전부 (2019.10.3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iT7gBbpM0xLQtMudRkypf1dl.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
- Agranoff, R. (2007). *Managing Within Networks: Adding Value to Public Organization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Ansell, C., & Gash, A. (2007).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 1-29.
- Borjas, George J. (1991).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1940-1980.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1, 287-291.
- Carlin, Wendy. (1996). *West German growth and institutions 1945-1990*. Crafts, Nicolas and Toniolo, Gianni(eds.) *Economic growth in Europe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5-497.

- Hardcastle, D., Powers, P., & S. Wenocur. (2004).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ooiman, J., ed. (1994).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 Kristen, C., & Granato, N. (2007).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second generation in Germany. *Ethnicities*, 4, 343-360.
- Osborne, David and Gaebler, Ted.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Addison-Wesley.
- Rethemeyer, R. Karl. (2005).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llaborative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1). pp.117-121.
- Rhodes, R. A. W.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
- Thompson, G., J. Frances, R. Levacic and J. Mitchell, eds. (1991). *Markets, Hierarchies and Networks: the Coordination of Social Life*. London: Sage.
- Thränhardt, Dietrich. (2001). *Einwanderungsland Deutschland-von der Tabuisierung zur Realität. Ursula Mehrländer and Günter Schulze(eds.) Einwanderungsland Deutschland. Neue Wege nachhaltiger Integration*. Bonn: J.H.W. Dietz Verlag
- Weiss, J. A. (1987). Pathways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7(1), 94-117.

[참고한 웹사이트]

Bundesamt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10 Prüfungen und Befähigungsnachweise.(http://www.gesetze-im-internet.de/bvfg/_10.html)(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2일)

Die Bundesregierung,. 2007. 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 Neue Wege - Neue Chancen, Repro und Verlag, Erfurt.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chiv16/Artikel/2007/07/Anlage/2007-10-18-nationaler-integrationsplan.pdf;jsessionid=5A4B2575033A15B676B697DA22E50871.s2t1?__blob=publicationFile&v=2(최종 검색일: 2014년 11월 2일)

Die Bundesregierung, 2012. Der Nationaler Aktionsplan Integration.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Anlagen/IB/2012-01-31-nap-gesamt-barrierefrei.pdf?__blob=publicationFile(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2일)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für Integration und Europa. 2013. Landesprogramm Modellregione Integration. http://www.integrationskompass.de/global/show_document.asp?id=aaaaaaaaaadhj(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2일)

<http://www.gesetze-im-internet.de/bqfg/index.html>;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2018): Spätaussiedleraufnahme im Freistaat Bayern. Zugang, Unterbringung, Integration, S.10.(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3일)

http://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Migrationshintergrund2010220107004.pdf?__blob=publicationFile(최종검색일: 2014년 11월 3일)

<http://www.netzwerk-iq.de/>(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_inhalt.html(최종검색일: 2019년 12월 9일)

<https://www.bildungsketten.de/de/235.php> (최종검색일: 2019년 12월 9일)

<https://www.ueberaus.de/wws/9.php#/wws/index.php?sid=29880259881117046753938253825330>(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VV_265_A_554-1#BayVV_265_A_554-9(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en/>(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0일)

<https://www.bildungsketten.de/de/1567.php>(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0일)

<https://www.bildungsketten.de/de/1573.php>(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3일)

<https://www.bildungsketten.de/de/1572.php>(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9일)

<https://www.bildungsketten.de/de/1570.php>(최종검색일 : 2018년 10월 10일)

<https://www.bildungsketten.de/de/1569.php>(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9일)

<https://www.jobstarter.de/de/kausa-21.php>(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9일)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nihongo_suishin/09/pdf/r1409907_02.pdf(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https://www.nishinippon.co.jp/item/n/486663/>(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공익재단법인 하마마쓰국제교류협회, 2018년도 사업보고서 http://www.hi-hice.jp/doc/aboutus/H30_jigyohokokusho.pdf(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https://www.adastria.co.jp/news/csr/2017121901/f>(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http://www.kodomo-nihongo.com/info/activity/20191112.html>(최종 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http://filipinonagkaisa.org/future-guide/>(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http://www.planet-beruf.de/>(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http://www.berufe.tv/>(최종검색일 : 2019년 12월 10일)

[법령정보]

교육부 훈령 제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자율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에서2019년12월12일인출)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국적법에서2019년12월12일인출)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2019년12월12일인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2019년12월12일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2019년 12월 12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2019년12월12일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2019년12월5일인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2019년12월5일인출)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김성은 · 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 · 윤철경 · 서고운 · 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 · 임정아 · 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 · 유민상 · 김창환 · 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 · 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 · 백혜정 · 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 · 정연 · 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 · 최정원 · 변금선 · 이종원 · 이민정 · 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 · 함세정

수시과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 · 이종원 · 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 · 김현철 · 문호영 · 이윤주 · 박지숙 · 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 · 이윤주 · 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규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 · 문수정 · 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 · 임희진 · 하형석 · 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류정희 · 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 · 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 · 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 · 김기현 · 하형석 · 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 · 김성은 · 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 · 박지영 · 이지혜 · 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 · 하태욱 · 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 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
추진사항'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